



NABO 재정동향&이슈

NABO Fiscal Trends & Issues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주요 재정동향 |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분석 외 11건

주요 재정이슈

| 군 급식 개선대책 추진현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 「NABO 재정동향&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 02-6788-377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재정동향&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 3

주요 재정동향

-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 / 8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 17
-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분석 / 24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 28
-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 32
-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21년도 실행계획 발표 / 36
- 2020 노인실태조사 발표 / 40
-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발표 / 46
-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 50
-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향후 접종 계획 / 54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의결 / 59
- 영국, 2021~2022 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발표 / 64
- CBO, 2021~2031년 재정전망 수정 / 68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 발표 / 72

주요 재정이슈

- 군 급식 개선대책 추진현황 / 7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82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재정지표

- ◆ 총수입·총지출
- ◆ 재정수지
- ◆ 국가채무

총수입 · 총지출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72.6조원 증가한 298.6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0.0%p 상승한 58.0%

- 총수입의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국세수입이 48.8조원 증가하고,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이 각각 3.2조원, 20.5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9.8조원 증가한
345.8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2%p 증가한 57.2%

- 총지출의 증가는 주로 일반회계 지출 및 기금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 일반회계 지출은 3.7조원 증가, 기금 지출은 17.8조원 증가

2020·2021 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0				2021(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1~6월 (누계, B)	진도율 (C=B/A)	추경 ¹⁾ (D)	6월 (당월)	1~6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총수입	470.7	478.8	226.0	48.0	514.6	37.2	298.6	58.0	72.6	10.0
• 국세수입	279.7	285.5	132.9	47.5	314.3	20.0	181.7	57.8	48.8	10.3
• 세외수입	29.1	26.9	13.1	45.2	29.3	1.8	16.4	56.0	3.2	10.8
• 기금수입	161.9	166.2	79.9	49.3	171.0	15.4	100.4	58.7	20.5	9.4
(사회보장성 기금) ²⁾	95.8	100.0	49.5	51.7	99.5	9.9	65.6	66.0	16.2	14.3
• 세입세출외	-	0.1	0.0	-	-	0.0	0.0	-	△0.0	-
◆ 총지출	554.7	549.9	316.0	57.0	604.9	63.9	345.8	57.2	29.8	0.2
• 예산	377.5	374.4	228.7	60.6	409.7	45.5	238.5	58.2	9.8	△2.4
- 일반회계	323.5	320.8	193.9	59.9	348.7	37.3	197.6	56.7	3.7	△3.2
- 특별회계	54.0	53.6	34.8	64.4	60.9	8.1	40.9	67.2	6.1	2.8
• 기금	177.3	175.2	87.2	49.2	195.2	18.5	105.0	53.8	17.8	4.6
(사회보장성기금)	61.2	59.1	28.9	47.3	63.2	5.4	33.1	52.4	4.2	5.1
• 세입세출외 ³⁾	-	0.4	0.1	-	-	-	2.3	-	2.2	-

주: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3)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2021.8.)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2021년도 6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7.2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42.8조원 개선되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9.7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30.8조원 개선

- 전년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된 주요 원인은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증가가 총지출의 증가율을 상회하였기 때문임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흑자규모가 12조원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 30.8조원 개선

2020·2021 회계연도 재정수지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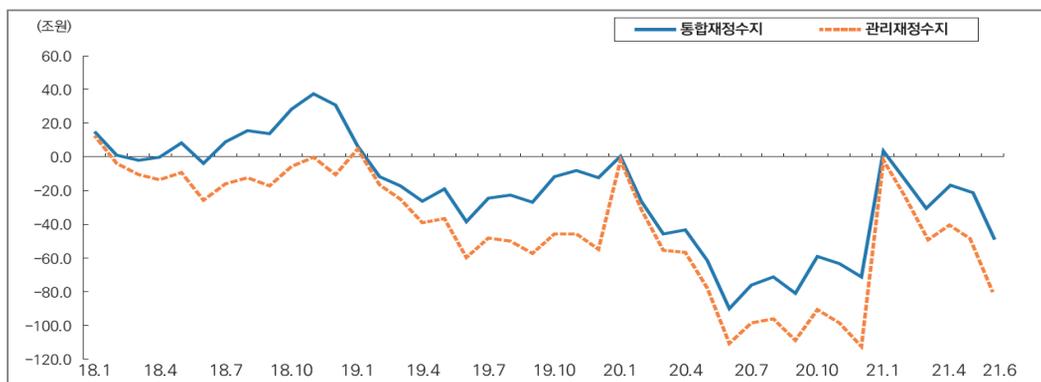
(단위: 조원, %, %p)

구 분	2020				2021(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A)	결산	1~6월(누계, B)	진도율(C=B/A)	추경 ¹⁾ (D)	6월(당월)	1~6월(누계, E)	진도율(F=E/D)	증감(E-B)	진도율(F-C)
◆ 총수입(A)	470.7	478.8	226.0	48.0	514.6	37.2	298.6	58.0	72.6	10.0
◆ 총지출(B)	554.7	549.9	316.0	57.0	604.9	63.9	345.8	57.2	29.8	0.2
◆ 통합재정수지(C=A-B)	△84.0	△71.2	△90.0	-	△90.3	△26.7	△47.2	-	42.8	-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D)	34.6	40.8	20.5	-	36.2	4.5	32.5	-	12.0	-
◆ 관리재정수지(E=C-D)	△118.6	△112.0	△110.5	-	△126.6	△31.2	△79.7	-	30.8	-

주: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2021.8.)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2021.8.)

국가채무

2021년도 6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월대비 1.7조원 감소한 898.1조원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819.2조원 대비 78.9조원 증가

- 국고채권 상환으로 전월대비 채무 감소

※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루어지나, 국고채 상환은 주로 연중 4회(3·6·9·12월) 이루어지고 있어 상황이 이루어지는 해당 월 외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2020·2021년도 중앙정부 채무 실적

(단위: 조원)

구분	2019	2020		2021(잠정)			증 감	
	결산(A)	결산(B)	전년(B-A)	추경 ¹⁾	5월(C)	6월(D)	전년(D-B)	전월(D-C)
◆ 중앙정부 채무	699.0	819.2	120.2	936.4	899.8	898.1	78.9	△1.7
• 국채 ²⁾	696.3	815.2	119.0	934.0	896.6	894.9	79.7	△1.7
- 국고채권	611.5	726.8	115.2	844.7	806.2	804.3	77.5	△1.9
- 국민주택채권	76.4	78.9	2.5	78.4	80.6	80.8	1.9	0.2
- 외평채권(외화)	8.3	9.5	1.3	10.9	9.8	9.8	0.3	0.0
• 차입금	2.6	3.3	0.7	2.3	2.6	2.5	△0.8	△0.1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7	0.6	0.1	0.7	0.7	0.0	0.0

주: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94억원이 포함됨

자료: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채무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재정동향

- ▶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
-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 ▶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분석
-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 ▶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 ▶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21년도 실행계획 발표
- ▶ 2020 노인실태조사 발표
- ▶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발표
- ▶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 ▶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향후 접종 계획
-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의결
- ▶ 영국, 2021~2022 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발표
- ▶ CBO, 2021~2031년 재정전망 수정
-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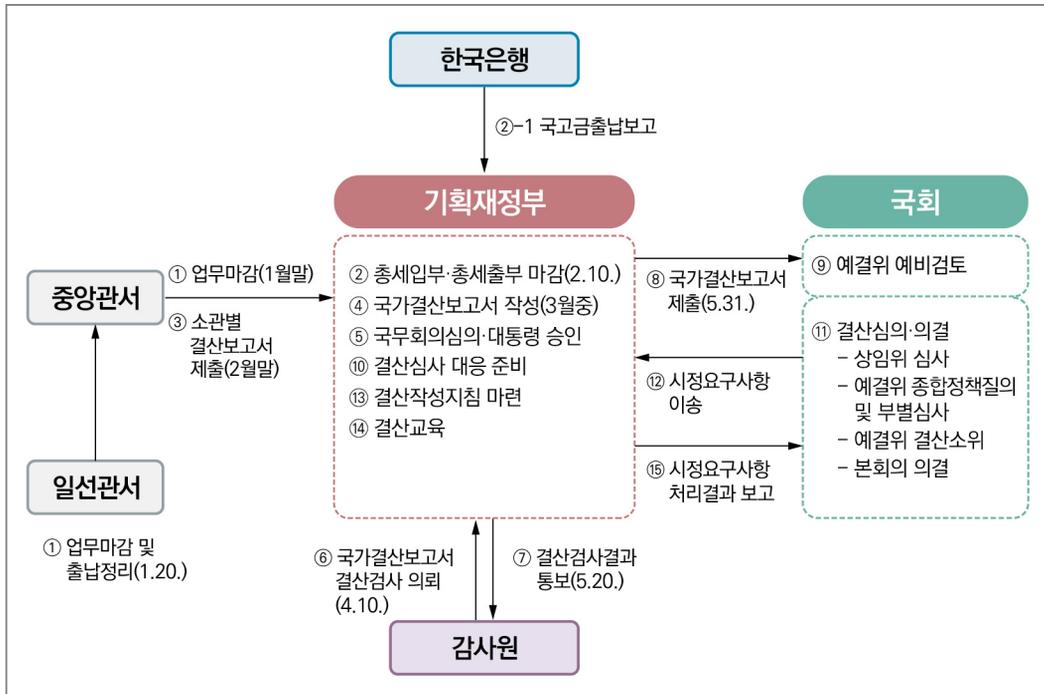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2021.5.31.)

● 국가결산보고서 개요

- (국가결산 체계)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6조 내지 제61조, 「국가회계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결산 체계





- 국가결산 관련 보고서 구성
 - (국가결산보고서) 결산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며,
 - 국가채무·채권·물품·국유재산보고서 등은 각각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하여 재무제표 부속서류로서 제출됨
 -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국회 의결을 받은 예비비를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사용하고 그 결과를 차기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임

국가결산 관련 보고서 구성

1. 국가결산보고서
 - (첨부서류)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 (참고자료)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중앙관서성과보고서, 결산개요(통계편), 성인지결산서(부처 종합본),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기금 재무제표, 정부기업특별회계및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재무제표
2.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 정부는 2021. 4. 6.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2021. 5. 31. 국회에 제출하였음

1) 결산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과 등을 요약
 세입세출결산: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결산결과를 종합
 재무제표: 회계·기금의 재정상태, 재정운영성과 및 순자산변동을 종합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 및 목표 달성 현황 분석

세입·세출 결산내역

- 총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465.5조원, 총세출은 453.8조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7조원이며,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3조원을 제외한 세잉여금은 9.4조원이 발생함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잉여금 (E=C-D)
합 계	465.5	453.8	11.7	2.3	9.4
일반회계	392.4	385.2	7.1	1.4	5.7
특별회계	73.1	68.6	4.5	0.9	3.6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2020년도 국가결산보고서

- 일반회계

- (세입 실적)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392.4조원으로 예산액 389.1조원 대비 3.2조원(0.8%)이 초과수입 되었는데, 이는 국세수입에서 예산 대비 4.4조원 초과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예산 대비 △1.2조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 전년도 실적에 대비하면 총 60.1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세수입은 △9.8조원 감소, 세외수입은 60.1조원이 증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19실적 (A)	2020년		2020예산대비 (C-B)	2019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	332.2	389.1	392.4	3.2	60.1
국세수입	286.0	271.9	276.3	4.4	△9.8
세외수입	46.2	117.2	116.1	△1.2	69.9

자료: 2020년도 국가결산보고서



- (세출 실적)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90.4조원 대비 98.7%인 385.2조원이 집행되었으며, 전년대비 54.3조원(16.4%) 증가하였음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19실적 (A)	'20년			'19대비 (C-A)
		예산현액 (B)	지출실적 (C)	집행률 (C/B)*100	
일반회계	330.9	390.4	385.2	98.7	54.3

자료: 2020년도 국가결산보고서

● 특별회계

- (세입 실적) 20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70.8조원 대비 2.3조원 증가된 73.1조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3.4조원이 증가된 규모임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19실적 (A)	'20년		'20년 예산대비 (C-B)	'19년 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	69.8	70.8	73.1	2.3	3.4
기타특별회계(15)	58.4	59.5	62.1	2.6	3.7
기업특별회계 (5)	11.3	11.3	11.1	△0.3	△0.3

자료: 2020년도 국가결산보고서

- (세출 실적)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72.4조원의 94.8%인 68.6조원을 지출 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2조원이 증가된 규모임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19실적 (A)	'20년			'19년 대비 (C-A)
		예산현액 (B)	실 적 (C)	집행률 (C/B)*100	
합 계	66.4	72.4	68.6	94.8	2.2
기타특별회계(15)	56.1	61.0	58.2	95.4	2.1
기업특별회계(5)	10.3	11.4	10.4	91.7	0.1

자료: 2020년도 국가결산보고서

기금 결산

- 2020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총 68개임
 - 기금은 운용성격 및 목적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 등 4가지²⁾로 분류됨
- 2020회계연도 68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788.9조원으로 기금계획 대비 △0.4조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로는 167.4조원이 증가하였음
 - 기금 가운데 수입·지출액 규모가 큰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268.8조원), 국민연금기금(164.1조원), 외국환평형기금(95.3조원), 주택도시기금(74.3조원), 고용보험기금(24.5조원) 등임

2020회계연도 기금 수입·지출 실적

(단위: 조원)

구분	'19년 실적(A)	'20년		계획대비(C-B)	'19년 대비(C-A)	
		기금계획(B)	결산액(C)			
수입	자체수입	164.5	172.6	176.6	4.0	12.2
	정부내부수입	162.8	220.7	218.4	△2.3	55.7
	차입금	127.2	198.7	200.8	2.1	73.6
	여유자금회수	167.1	197.3	193.0	△4.3	25.9
합계	621.6	789.4	788.9	△0.4	167.4	
지출	사업비	134.4	171.5	163.0	△8.5	28.6
	기금운영비	2.7	2.8	2.8	△0.1	0.1
	정부내부지출	156.0	267.3	262.8	△4.5	106.8
	차입금원금상환	89.7	97.5	92.2	△5.3	2.5
	차입금이자상환	19.5	21.2	20.0	△1.2	0.5
	여유자금운용	219.3	229.0	248.1	19.1	28.9

자료: 2020년도 국가결산보고서

2) 사회보험성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기금으로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이 있고, 계정성기금은 어떤 목적의 자금 역할을 위한 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있으며, 금융성기금은 금융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8개 기금이 있고, 사업성기금은 사업 성격을 가지는 기금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49개에 이에 해당됨.



총수입·총지출 결산(재정수지)

- 2020년도 총수입은 추경 대비 8.1조원 증가한 478.8조원 수준이며, 총지출은 추경 대비 △4.8조원 감소한 549.9조원을 집행하였음
 -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12.8조원 개선된 △71.2조원 적자를 시현하였음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6.6조원 개선된 △112.0조원 적자를 시현하였음

2020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결산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D-B)
	추경 (A)	결산 (B)	추경대비 (B-A)	추경 (C)	결산 (D)	추경대비 (D-C)	
I. 총수입	476.4	473.1	△3.3	470.7	478.8	8.1	5.7
II. 총지출	475.4	485.1	9.7	554.7	549.9	△4.8	64.9
III. 통합재정수지(I-II)	1.0	△12.0	△13.0	△84.0	△71.2	12.8	△59.2
IV.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3.3	42.4	△0.9	34.6	40.8	6.2	△1.6
V. 관리재정수지(III-IV)	△42.3	△54.4	△12.1	△118.6	△112.0	6.6	△57.5

주: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2020년도 국가결산보고서

국가채무

- 「국가재정법」 제91조에 따른 2020년 말 국가채무는 846.9조원으로 2019년 말에 비해 123.7조원 증가하였고, GDP대비 비율은 6.2%p 상승('19년: 37.6% → '20년: 43.8%)하였음
 - (국가채무의 구성)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국채가 국가채무의 약 96.3%(815.2조원)를 차지하는데, 국채는 국고채권 726.8조원, 국민주택채권 78.9조원,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5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채무 증가요인) 국가채무가 123.7조원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국채 증가(119.0조원)때문임. 국채 중 국고채권이 115.2조원 순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102.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규모 증가(8.0조원) 등에 기인함

국가채무 종류별 규모와 증감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국 가 채 무	626.9	660.2	680.5	723.2	846.9	123.7
(GDP 대비)	(36.0)	(36.0)	(35.9)	(37.6)	(43.8)	6.2%p
▶ 국 채	551.5	587.5	623.3	696.3	815.2	119.0
- 국고채권	485.1	516.9	546.7	611.5	726.8	115.2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7.1	6.7	7.2	8.3	9.5	1.3
- 국민주택채권	59.3	64.0	69.4	76.4	78.9	2.5
▶ 차입금	3.3	3.9	3.8	2.6	3.3	0.7
- 국내 차입금	3.2	3.9	3.8	2.6	3.3	0.7
- 해외 차입금	0.0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1.7	0.5	0.2	0.1	0.7	0.6
▶ 지방정부 순채무	35.0	32.8	28.7	24.2	27.7 ¹⁾	3.5

주: 2020년 지방정부순채무 결산기준액은 잠정치(지방자치단체 결산 이후 확정 예정)

자료: 대한민국 정부, 각 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재무제표

- 2020회계연도말 기준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487.1조원, 부채는 1,981.7조원이고, 순자산(자산-부채)은 505.4조원임
 - *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장·단기투자증권, 토지·건물 등 일반유형자산,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며, 부채에는 금전채무 외에도 각종 장기충당부채와 장기미지급비용 등 발생주의 개념에 따른 부채도 포함됨
 - 자산은 전년 대비 187.7조원(8.2%), 부채는 전년 대비 238.0조원(13.6%)이 각각 증가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0.3조원(9.1%)이 감소함



자산·부채 구성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년(A)	'19년(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산합계(a)	2,487.1	2,299.4	187.7	8.2
Ⅰ. 유동자산	504.0	458.9	45.1	9.8
Ⅱ. 투자자산	1,015.3	914.0	101.3	11.1
Ⅲ. 일반유형자산	604.1	577.6	26.5	4.6
Ⅳ. 사회기반시설	347.9	334.9	13.0	3.9
Ⅴ. 무형자산	2.0	1.5	0.5	33.3
Ⅵ. 기타비유동자산	13.8	12.5	1.3	10.4
부채합계(b)	1,981.7	1,743.7	238.0	13.6
Ⅰ. 유동부채	167.9	153.5	14.4	9.4
Ⅱ. 장기차입부채	658.5	546.9	111.6	20.4
Ⅲ. 장기총당부채*	1,102.6	1,000.3	102.3	10.2
- 연금총당부채	1,044.7	944.2	100.5	10.6
- 퇴직수당총당부채	49.0	48.4	0.6	1.2
- 기타	8.9	7.7	1.2	15.6
Ⅳ. 기타비유동부채	52.7	43.0	9.7	22.6
순 자 산(a-b)	505.4	555.7	△50.3	△9.1

주: 총당부채는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회계상의 추정부채로 차입금, 국채 등과는 성격이 다름

자료: 2020년도 국가결산보고서

재정수지 악화 및 국가채무 비율 증가를 고려할 필요

- 총세출 규모는 453.8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1%가 집행되는 등 양호한 집행률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일반회계: 98.7%, 특별회계: 94.8%). 다만 2020년 결산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첫째,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리재정수지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
 - (관리재정수지 추이) ('15년)△38.0조원에서 ('18년)△10.8조원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54.4조원, 2020년에는 △112.0조원으로 악화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2024년에는 관리재정수지가 △12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3.6%에서 34.2%로 0.6%p 증가했으나, 2019년은 전년대비 2.2%p, 2020년은 전년 대비 6.2%p 증가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국민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 안정화 및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021년 7월 2일 국회에 제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편성배경 및 목적
 - 정부는 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상생을 위한 국민지원, ② 코로나19 방역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③ 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한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을 편성
- 심사과정
 - (심사경과) 국회는 7월 13일 상임위원회 상정 개시,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을 거쳐 7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
 - (심사기간) 이번 추경안은 국회 제출 후 23일(초일 산입 기준)만에 확정
- 재원 및 규모
 -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총 35.0조원이며, 재원은 추가세수 예상분(31.5조원),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7조원), 기금재원(1.8조원)으로 구성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재원 및 규모

(단위: 조원)

재원		규모	
- 추가세수 예상분(세입 증액경정)	31.5	- 세출 증액	33.0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7	- 국채 상환	2.0
- 기금 재원	1.8		
합 계	35.0	합 계	35.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021.7.1.

- 주요내용: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분야에 13.4조원, ‘백신·방역 보강’ 분야에 4.4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분야에 2.6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2.6조원이 편성되었음
 -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분야에 편성된 13.4조원은 소상공인 피해지원(3.9조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8.1조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0.3조원), 상생소비지원금(1.1조원)으로 구분
 - ‘백신·방역 보강’ 분야에 편성된 4.4조원은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피해보상(2.0조원), 방역 대응 및 손실보상(2.2조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및 국내백신 개발(0.2조원)로 구분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분야에 편성된 2.6조원은 고용 조기회복 지원(1.1조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0.9조원),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제고(0.2조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0.4조원)으로 구분
 -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편성된 12.6조원은 지역상권·농어가 지원(0.4조원), 지방재정 보강(12.2조원)으로 구분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편성목적별 세부내역

(단위: 조원)

구분	주요내용	규모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소상공인 피해지원	3.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1
백신·방역 보강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피해보상	2.0
	방역대응 및 손실보상	2.2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및 국내백신 개발	0.2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고용 조기회복 지원	1.1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0.9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제고	0.2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4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
	지방재정 보강	12.2
총규모		33.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021.7.1.



국회 심사 결과, 3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확정

● 심사결과

- (총지출) 정부안 604.7조원에서 △23,796억원이 감액되고 25,775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1,979억원 증액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결과 총수입·총지출 변동

(단위: 억원)

구분	증액(A)			감액(B)			순증(A-B)		
	예산	기금	소계	예산	기금	소계	예산	기금	소계
총수입	-	-	-	-	-	-	-	-	-
총지출	12,004	13,771	25,775	△10,498	△13,298	△23,796	1,506	473	1,979

주: 증감합계는 단수처리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7.24.

-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90.3조원 적자로 제1회 추경 대비 0.4조원 악화되었고, 관리재정수지는 △126.4조원 적자로 제1회 추경과 동일
- (국가채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2021년 말 국가채무 전망치는 963.9조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0조원 감소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결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변동

(단위: 조원)

구분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추경예산(확정) (C)	제1회 추경 대비 증감 (C-A)	제2회 추경안 대비 증감 (C-B)
통합재정수지	△89.9	△90.1	△90.3	△0.4	△0.2
관리재정수지	△126.4	△126.2	△126.4	0	△0.2
국가채무(D1)	965.9	963.9	963.9	△2.0	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1.7.24.

주요 감액·증액 사업

- 감액 사업

- 이번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지출 기준 2조 3,796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①소상공인성장 지원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7,000억원), ②상생소비지원금(△4,000억원), ③국채이자 상환액(△2,252억 9,500만원)이 전체 감액규모 중 큰 비중(55.7%)을 차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주요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기금	부처	사업명	추경안 (증액분) (A)	국회심사 결과 (B)	추경예산 (확정) (증액분) (A+B)
예산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	1,100,000	△400,000	700,000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138,546	△46,100	92,446
		방위사업청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	△100,000	△100,000
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	기획재정부	국고채 이자상환	△24,132	△225,295	△249,427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220,688	△110,344	110,344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 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100,000	△700,000	△1,800,000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7.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1.7.24.



● 증액 사업

-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증액규모는 총지출 기준 2조 5,775억 3,500만원으로, ①소상공인성장지원 중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9,737억원), ②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5,009억 1,100만원), ③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4,034억 300만원)가 전체 증액규모 중 큰 비중(72.9%)을 차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기금	부처	사업명	추경안 (증액분) (A)	국회심사 결과 (B)	추경예산 (확정) (증액분) (A+B)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8,121,198	500,911	8,622,109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622,909	403,403	1,026,312
			소상공인성장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45,397	973,700	4,219,097
백신·방역 보강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1,571,100	200,000	1,771,100
	일반회계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235,101	100,000	335,101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56,000	64,000	120,000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버스운수종사자특별지원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	45,600	45,600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고수온 대응지원(전복 우량 종묘 실증))	-	2,000	2,000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고수온 대응지원(재해예방형가두리지원))	-	1,200	1,200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7.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1.7.24.

- 국회는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10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관한 주요 부대의견

주요 부대의견 내용

- 정부는 연말 세입추계를 감안하여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국회 감액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추가지출 소요 발생 시 기금 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각 추경사업 소관 부처는 올해 편성한 2차재 추경예산의 회차별·사업별 실행현황을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와 2021 회계연도 결산의 국회 제출 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 중소기업부는 ‘소상공인성장지원(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에 있어 노점상의 특성과 생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집행을 제고에 노력한다.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7.24.

재정총량 및 국가채무

- 재정총량 변동
 - (총수입·총지출) 총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31.6조원 증가한 514.6조원, 총지출은 제1회 추경 대비 31.8조원 증가한 604.7조원으로 편성
 -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90.1조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적자(△89.9조원)에 비해 적자폭이 0.2조원 증가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4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26.2조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126.4조원)에 비해 적자폭이 0.2조원 축소
-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963.9조원(GDP 대비 47.2%) 수준으로, 제1회 추경 기준 965.9조원(GDP 대비 48.2%)과 비교하여 2.0조원 감소(GDP 대비 비율은 1.0%p 감소)



추경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 %p)

구분	2020		2021			증감 (B-A)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B)	
총수입	481.8	470.7	482.6	483.0	514.6	31.6
총지출	512.3	554.7	558.0	572.9	604.9	32.0
통합재정수지	△30.5	△84.0	△75.4	△89.9	△90.3	△0.4
(GDP대비)	(△1.5)	(△4.4)	(△3.7)	(△4.5)	(△4.4)	(0.1)
관리재정수지	△71.5	△118.6	△112.5	△126.4	△126.4	0
(GDP대비)	(△3.5)	(△6.1)	(△5.6)	(△6.3)	(△6.2)	(0.1)
국가채무	805.2	846.9	956.0	965.9	963.9	△2.0
(GDP대비)	(39.8)	(43.9)	(47.3)	(48.2)	(47.2)	(△1.0)

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본예산·추경예산 확정시 전망치를 사용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021.7.1.

추경예산의 적시 집행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필요

-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상생을 위한 국민지원, 코로나19 방역 안정화, 민생경제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관련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이번 추경을 통한 국채상환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고채 금리 상승세는 국가채무 및 가계·기업대출의 이자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21년 제1회 추경) 48.2% → (2021년 제2회 추경) 47.2%

※ 국고채 3년물(평균) 금리 추이: (2020) 0.99% → (2021.3.) 1.13% → (2021.4.) 1.14% → (2021.5.) 1.13% → (2021.6.) 1.30%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분석

기획재정부는 350개 공공기관¹⁾의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를 공시 (2021.4.30.)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2020회계연도 자산총액은 902.4조원, 부채총액은 544.8조원, 당기순이익은 5.3조원임
 - 2019년 대비 2020년 총 자산은 41.6조원 증가(4.8%)함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산 증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자산 건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의 발전설비 투자 증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상품(HMM) 투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확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에 주로 기인한 것임
 - 2020년 말 부채 총액은 544.8조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7.9조원(3.4%) 증가함
 - 2020년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부채 증가 3.8조원은 건설투자비 및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사채 증가(2조원), 원전사후처리복구충당부채 증가(1조원) 등에 기인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채 증가(3.2조원)는 융자사업 확대에 따른 공채 추가 발행 등에 따른 것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대주택 공사를 위한 금융부채 3조원 증가
 - 공공기관 총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6조원 이후 2019년 0.8조원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5.3조원으로 2019년 대비 4.5조원 증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손익이 2019년 △3.6조원에서 2020년 1.6조원으로 5.2조원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3.3조원), 한국해양진흥공사(2.8조원),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종속회사(2.1조원)에서 당기순이익 발생

1)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 등 총 350개 기관을 지정(2020년 대비 동일함) 하였으며, 2021년에 지정한 350개 기관에 대하여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를 공시함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2016~2020년)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A)	2020(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799.5	809.9	828.2	860.8	902.4	41.6	4.8
부채	500.3	495.1	503.4	526.9	544.8	17.9	3.4
당기순이익	15.7	7.3	0.7	0.8	5.3	4.5	562.5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1.4.30.

- 상기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 산정 시 제외²⁾된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0년말 부채 총계는 683.6조원으로 2019년 대비 75.4조원 증가하였으며, 2020년 당기순이익의 총합계는 4.1조원으로 전기 대비 1.78조원 증가하였음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2018~2020년)

(단위: 조원)

구분		2018	2019(A)	2020(B)	증감 (B-A)
부채	한국산업은행	225.8	233.8	264.0	30.2
	한국수출입은행	76.8	79.1	83.6	4.5
	중소기업은행	268.4	295.3	336.0	40.7
	합계	571.0	608.2	683.6	75.4
당기 순이익	한국산업은행	0.71	0.28	2.00	1.72
	한국수출입은행	0.68	0.43	0.10	△0.33
	중소기업은행	1.76	1.61	2.00	0.39
	합계	3.15	2.32	4.10	1.78

자료: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0년 말 평균 BIS 비율은 15.29%로, 일반은행 평균 BIS비율 17.14%에 비해 1.85%p 낮은 바, 일반은행과의 차이는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9년부터 확대되는 추세로 전환

2)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아닌 BIS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 산정 시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있음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BIS 비율 현황 (2016-2020년)

(단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A)	2020(B)	증감 (B-A)
한국산업은행	14.86	15.26	14.80	14.05	15.96	1.91
한국수출입은행	10.77	12.90	14.42	14.56	15.09	0.53
중소기업은행	13.13	14.20	14.50	14.47	14.82	0.35
3개 은행 평균 (a)	12.92	14.12	14.57	14.36	15.29	0.93
일반은행 평균 (b)	15.77	15.84	15.90	15.89	17.14	1.25
차이 (a-b)	△2.85	△1.72	△1.33	△1.53	△1.85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 은행형 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조항³⁾이 있으며, 상기와 같은 정책금융 지원 확대에 따른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업의 순이익 감소

- 2020년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5.3조원인데 반해 36개 공기업은 △1,758억원의 당기순손실 시현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레저 및 여행 관련 공기업의 매출 침체 및 부채 증가세가 지속됨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객사업 매출 감소 추세이며, 고정비(인건비, 상각비 및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가 크게 발생해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각각 △1.6조원 및 △3,906억원 감소하였지만 매출원가는 고정비적 성격(인건비 및 상각비 등)이 큰 탓에 매출총손실 발생(각각 △1,567억원 및 △1,360억원)
 - 강원랜드 및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2020년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각각 8,446억원 및 1,641억원의 금융상품 회수 등을 통한 양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발생하여 부채비율은 감소함

3)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할 수 있거나(임의적 손실보전), 보전하여야(의무적 손실보전) 함



여행 및 레저 관련 공공기관의 당기순손익 현황 (2011~2020년)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A)	2020 (B)	증감 (B-A)
한국철도공사	4,507	△28,202	△43,310	△3,383	864	△2,265	△8,555	△1,050	△469	△13,427	△12,958
인천국제공항공사	3,391	5,257	4,721	6,185	7,714	9,650	11,168	11,209	8,634	△4,229	△12,863
한국공항공사	1,032	1,382	1,286	1,735	1,874	1,902	1,898	1,259	188	△1,487	△1,675
한국마사회	3,350	3,209	2,751	2,415	2,439	2,300	2,227	1,828	1,449	△4,368	△5,817
강원랜드	3,934	2,965	2,931	3,638	4,305	4,550	4,371	2,973	3,356	△2,788	△6,144
그랜드코리아레저	633	1,441	1,376	1,165	917	1,143	805	776	720	△651	△1,371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개 공기업의 자본잠식 확대로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모색 필요
 - 2020년에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이며, 2019년 대비 △2.2조원 감소한 △2.4조원 인식하였으며 해외 개발자산 손상 및 이자비용 부담에 기인함
 - 추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포괄 승계할 한국광해광업공단(2021년 9월 설립 예정)은 자체수입 창출 및 채무 상환 계획 등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20년 자본잠식인 공공기관의 당기순손익 및 부채현황 (2018~2020년)

(단위: 억원)

구분	당기순손익					부채	
	2018 (a)	2019 (b)	2020 (c)	증감		2020	2019 대비 증감
				(b-a)	(c-b)		
한국석유공사	△11,595	△1,548	△24,392	10,048	△22,844	186,449	5,140
한국광물자원공사	△6,861	△5,638	△13,543	1,223	△7,905	67,535	3,402
대한석탄공사	△823	△1,221	△1,147	△397	74	21,058	1,24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2021.5.21.)

- 교육부는 교육·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 또는 퇴출을 지원하고 일반재정지원¹⁾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화 추진과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대학 유형	정책방향	
한계대학 - 재정지원제한 대학 -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 ●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한 구성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및 이행점검 ● 위험대학 관리 ●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자율혁신대학 - 일반재정지원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규모화,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계획 수립·추진 ● 지역 수요, 대학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 전략 추진 지원(연구 중심 대학 지향, 특성화 강화, 평생직업교육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지원 ● 유지총원을 점검 ● 정원 조정 유연화 ● 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전환 지원

자료: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2021.5.21.

참고 대학 유형은 2021년에 실시 계획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라 결정되며,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됨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

대학 구분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21년 진단	진단 참여 대학	지원	신청 가능	지원
	선정 대학 (일반재정지원대학)	제한	신청 가능	지원
	미선정 대학	제한	일부 제한 ¹⁾	지원
진단 미참여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제한	제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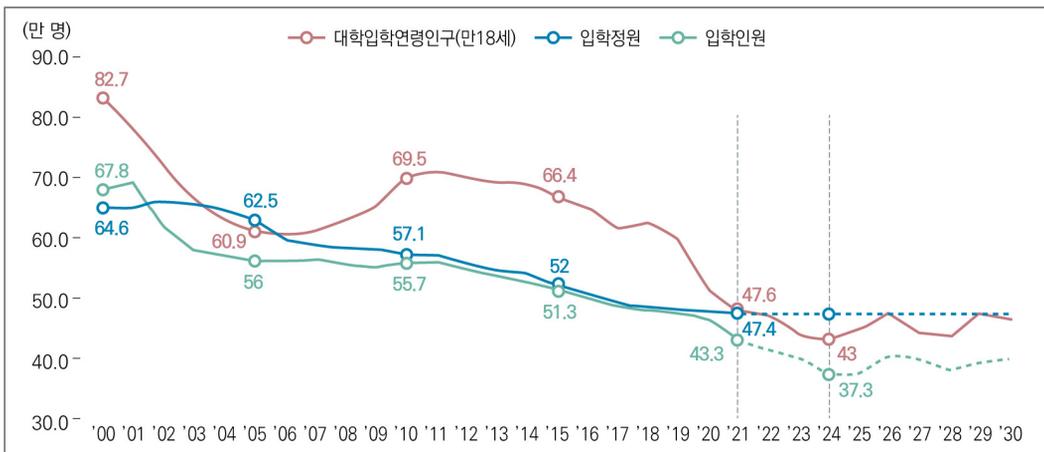
주: 1)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자료: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2019. 8. 14.
 교육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 발표」, 2020. 9. 1.

1) BK21 등과 같이 특수목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대학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총액으로 지원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말함



- 동 전략의 수립 배경은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총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하고 2030년까지 유사한 규모 유지 예상
 - ※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인원(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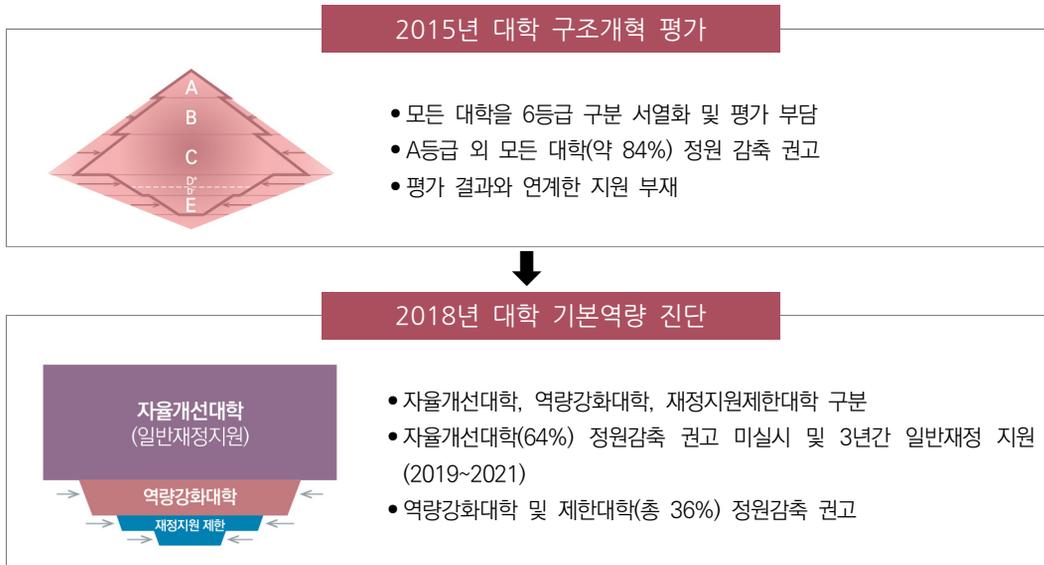


주: 입학인원은 20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 2022년 이후는 추계치
 자료: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2021.5.21.

대학평가방식 개선 및 대학지원 정책 추진경과

- 2017~2021년 4년 간 교육부 고등교육 지원 예산 약 2조원을 확충하는 등 대학 재정지원 확대
 - 고등교육분야 예산: (2017) 9.2조원 → (2018) 9.5조원 → (2019) 10.1조원 → (2020) 10.8조원 → (2021) 11.1조원
 - ※ 2021년 주요 고등교육 지원 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 1조 981억원(일반재정지원), 국립대 육성 1,500억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1,710억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823억원, BK21 4,216억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4조 1,861억원 등
- 2018년 기존 평가방식의 문제점²⁾을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대학에 정원감축을 강제하는 대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와 연계한 지원을 한다는 취지
 - 분절적·경쟁적·특수목적 지원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계획에 따라 일반 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개편·신설³⁾하고, 2019~2021년 동안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자율개선대학(평가대학의 64%)에 해당하면 지원

2018년 대학 평가방식 개선 내용



자료: 교육부

2) 기존 대학평가(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세세한 등급화로 인한 서열화 및 지역 대학 고려가 부족하고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재정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

3) 5개 특수목적사업(대학의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 개편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정책기조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추진이라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이를 촉진하기 위해 총원률 점검 등 다양한 세부 정책기제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기존보다 정부주도 정원감축 기조를 강화하는 것임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총원률 진단지표 비중 확대를 통한 선제적 정원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22~2024년 대학재정지원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⁴⁾과 연계하여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계획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원률 진단지표 비중 확대를 통한 선제적 정원 감축 ●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대해 3년간 일반재정 지원 및 유지총원률 점검을 통한 적정 규모화 촉진
---	--

자료: 교육부

- 또한 교육·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기존 자율적인 구조개혁 및 통·폐합을 유도하고 폐교시 사후적인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것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 이와 함께 2020년 도입된 지자체-대학 중심의 지역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대학, 일반대-전문대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
 - 2021년 지원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1,710억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823억원

세부적 운영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교육부는 2018~2021년 동안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를 중심으로 2021년 대학 입학정원 미충원이 발생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전략의 세부적 운영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예산분석관(02-6788-4634)

4)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2021. 8. 17)에 따르면, 진단대상 대학은 319개교, 진단참여 신청대학 285개 중 일반재정지원 선정대학은 233개교이며,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거쳐 8월말 확정 예정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2021.5.28.)

- 정부는 청년 창업의 열기를 확산하고 제2벤처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청년 창업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
 - 정부가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젊은 창업가의 역할이 중요해짐
 - ※ 기술기반 청년 창업기업(천개): ('16) 76 → ('18) 82 → ('20) 89
 - ※ 정부 창업지원 예산: ('16) 5,764억원 → ('21) 1조 4,363억원 (약 2.5배 증가)
- 준비된 청년들의 도전을 사회가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4대 분야(① 기반, ② 창업도전, ③ 창업성장, ④ 재도전)의 28개 세부과제 마련
 - 일반 창업과는 다른 청년창업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분야별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① 지역창업을 위한 거점 및 연계 부족, ② 창업도전을 위한 경험 및 네트워크 부족, ③ 청년들만의 특수한 환경(인력확보, 주거 및 생활비 걱정 등)으로 창업활동에 집중 곤란 등을 청년창업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분석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비전 및 4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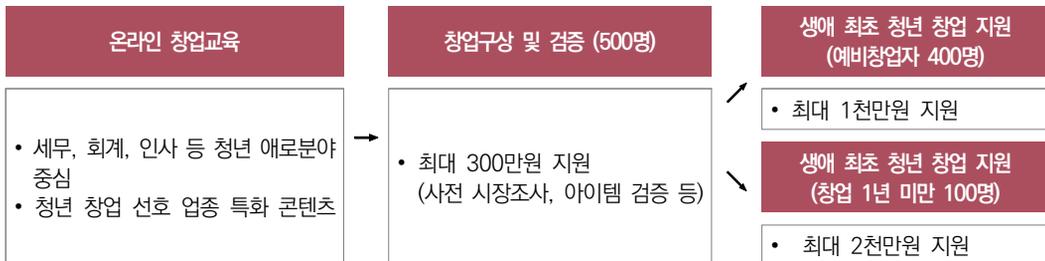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 (분야 1) 지역 청년창업의 중심거점 조성 및 역할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하고, ‘유스데이(청년창업 문제해결의 날, 공개멘토링)’와 ‘청년창업 헬프데스크(개별 상담)’를 운영
 - 대학의 연구·주거·인재양성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가칭)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하고,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활성화 시키며, 대학 실험실 연구성과를 활용해 기술창업 촉진
- (분야 2) 청년창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보강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창업구상부터 실제 창업까지 창업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청년전용·청년특화 팁스(TIPS)¹⁾ 프로그램 및 팁스타운 내 청년 창업기업 전용 공간을 운영하고, 글로벌기업·대기업 협업을 통해 유망 청년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청년창업 단계별 창업지원 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분야 3) 청년 창업 현장의 4대 핵심 애로 해결
 - (인력) IT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인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스타트업들의 인재 채용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청년인재 육성과 매칭환경 조성(①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Year-Dream) 프로젝트2’), ② ‘SOS(Star Of Startup) 개발자 프로젝트3’) 운영

1)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팀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2)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는 학력·전공 무관, 2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스타트업 맞춤형 인공지능 개발자 집중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교육생과 인공지능 개발자 채용의사가 있는 스타트업 간에 맞춤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젝트이다.

3) SOS 개발자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인지도가 높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개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풀을 구성하고, 기초 개발 역량은 있으나 현장경험이 부족한 청년 초보 개발자를 모집하여 스타트업이 인턴으로 채용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청년 초보 개발자를 개발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개발자들은 개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 (제조) 독자적인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해 외주생산에 의존하는 청년 제조 스타트업을 위해 시제품 제작·본격양산을 위한 정보·장비·공간 거점 확충(① 청년 창업기업 제조·생산 종합 플랫폼 구축, ② 전국 메이커스페이스⁴)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
 - (자금)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을 위한 자금 지원(① 전용 보증 신설, ② 투자 펀드 조성, ③ 정책자금 확대, ④ 세제 및 부담금 완화, ⑤ 아이디어 임치 무상 지원)
 - (주거) 청년 스타트업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 활동에 전념하도록 임대주택 입주 우대
- (분야 4) 청년들의 실패 경험을 미래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
 -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하여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따뜻한 재도전 환경 조성(① ‘재도전 응원캠프’ 신설, ② 성실실패 청년 채무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 지원)
 - 청년 재창업만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도입(① 청년 재창업자 전용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신설, ② 민간과 연계한 청년 재창업자 투자지원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4대 분야	세부 추진 과제
① 지역 청년창업 중심거점 조성 및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청년창업의 출발점으로 개편 • 대학의 청년창업 환경 개선 및 역할 강화
② 청년창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과 현장 실습을 결합한 청년창업 완전정복 지원 • 처음 창업하는 청년 전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창업 특화 팁스(TIPS) 신설 • 글로벌 기업 협업방식 유망 청년스타트업 발굴·육성
③ 청년 창업 현장의 4대 핵심 애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청년 인공지능 개발인력 공급 및 매칭환경 조성 • (제조) 시제품 제작·본격양산을 위한 정보·장비·공간 거점 확충 • (자금) 청년 창업 초기 자금 부담 대폭 완화 • (주거) 청년 창업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
④ 청년들의 실패 경험을 미래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실패를 품어주는 따뜻한 재도전 환경 조성 • 청년 재창업 도전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운영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4)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s)란 메이커(Maker)들의 활동공간으로 제작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 그리고 기술적, 비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서진원·최종인,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s)의 공간구성 요인과 혁신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20)



-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목표 및 기대효과
 - 연간 2.3만명의 청년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과 멘토링 지원
 - 준비된 신규 청년 창업기업을 2020년에 1,000개 추가 발굴·육성
 -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부담 연간 1조원 경감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목표 및 기대효과

목표 및 기대효과

- ① 연간 2.3만명의 청년창업 멘토링 및 교육 지원
- ② 준비된 신규 청년 창업기업 금년 1,000개 추가 발굴·육성
- ③ 청년창업기업 초기 자금부담 연간 1조원 경감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 점검 및 협업체계 강화 필요

-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이 질 높은 창업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 점검 필요
 - 본 대책의 목표 및 기대효과는 청년창업을 위한 재정적, 정책적 투입과 청년 창업 관련 양적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생존율⁵⁾이 낮은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 속에서, 청년 창업의 활성화가 질 높은 창업의 확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을 평가하는 성과지표가 창업의 질 등 정책의 결과(outcome)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의 열기와 제2벤처붐 지속 확산을 위해 협업체계의 강화 필요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은 중기부와 교육부, 과기부, 기재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이 필요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김소연 예산분석관(02-6788-3734)

5) 생존율이란 기업의 신생 이후, 경과년까지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속한 비율을 의미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7%이며, 5년 생존율은 31.2%로 나타났다. (통계청,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2020)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21년도 실행계획 발표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은 2012년 8월 제1차 기본계획(2013~2017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제2차 기본계획(2019~2023년) 시행중

-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은 산업융합의 효율적 촉진을 목적으로, 「산업융합촉진법」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된 법정계획임
 - 이에 따라,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3~2017)」이 2012년 8월 발표되었으며, 이후 2019년 4월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9~2023)」이 수립되어 각 연도별 실행계획이 시행중
 - 동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심의·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담당 (「산업융합촉진법」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18.10.) 이전인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3~2017)」까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심의·조정
-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3~2017)」 기간 동안, 재정투자계획 규모는 2013년 1조 9,720억원에서 2017년 2조 6,257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
 -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3~2017)」은 융합생태계 및 범부처 융합 거버넌스 체제 취약, 융합인력 등 인프라 미흡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산업융합을 범부처 국가 신성장 모멘텀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고 발전전략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립
 - 총 재정투자계획(억원): 19,720('13)→20,355('14)→22,574('15)→24,588('16)→26,257('17)
 -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2013·2014·2016년에는 '지속성장 강화' 분야가 9,152~9,878억원 수준, 2015·2017년에는 '산업융합 강국 견인' 분야가 8,557~9,769억원 규모로 타 분야에 비해 큰 예산규모
 - 부처별 재정투자계획: 1차 계획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가 7,629~12,161억원으로 예산규모가 가장 큰 부처였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5,146~7,394억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부처
 - 주요 성과목표별 재정투자계획: 1차 계획기간 동안 '산업융합을 통한 산업강국 실현'(6,500~9,500억원),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구축'(6,354~7,599억원)이 타 성과목표에 비해 높은 예산비중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3~2017)」의 실행계획별 주요 내용

실행계획	주요 내용
2013년도 실행계획 (20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총 재정투자계획: 1조 9,720억원 - 주요 분야(억원): 지속성장 강화(9,152), 산업융합 강국(6,745), 스마트융합 생활 구현(3,331), 창의 융합인프라(492) - 주요 부처(억원): 지식경제부(12,161), 교육과학기술부(2,528) 등 - 주요 성과목표(억원):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구축(7,142), 산업융합을 통한 산업 강국 실현(6,500) 등
2014년도 실행계획 (20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총 재정투자계획: 2조 355억원 - 주요 분야(억원): 지속성장 역량강화(9,408), 산업융합 강국 견인(7,263), 살기좋은 생활 구현(3,213), 창의 융합인프라 조성(471) - 주요 부처(억원): 산업통상자원부(11,145), 미래창조과학부(5,146) 등 - 주요 성과목표(억원): 산업융합을 통한 산업강국 실현(6,949),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구축(6,918) 등
2015년도 실행계획 (20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총 재정투자계획: 2조 2,574억원 - 주요 분야(억원): 산업융합 강국 견인(8,557), 살기좋은 생활 구현(7,691), 지속성장 역량 강화(5,477), 창의 융합인프라 조성(849) - 주요 부처(억원): 산업통상자원부(7,629), 미래창조과학부(7,198) 등 - 주요 성과목표(억원): 산업융합을 통한 산업강국 실현(8,348),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구축(7,599) 등
2016년도 실행계획 (20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총 재정투자계획: 2조 4,588억원 - 주요 분야(억원): 지속성장 역량 강화(9,878), 산업융합 강국 견인(7,653), 살기좋은 생활 구현(5,830), 창의 융합인프라 조성(1,227) - 주요 부처(억원): 산업통상자원부(10,758), 미래창조과학부(5,569) 등 - 주요 성과목표(억원): 산업융합을 통한 산업 강국 실현(7,385),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구축(7,337) 등
2017년도 실행계획 (20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총 재정투자계획: 2조 6,257억원 - 주요 분야(억원): 산업융합 강국 견인(9,769), 지속성장 역량 강화(9,216), 살기좋은 생활 구현(4,984), 창의 융합인프라 조성(2,288) - 주요 부처(억원): 산업통상자원부(10,630), 미래창조과학부(7,394) 등 - 주요 성과목표(억원): 산업융합을 통한 산업 강국 실현(9,500),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구축(6,354) 등

자료: 각 정책을 바탕으로 재구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21년 실행계획」 발표(2021.5.)

-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른 연도별 재정투자계획 규모는 2019년 2조 8,202억원에서 2021년 3조 5,929억원으로 연평균 12.9% 증가
 -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9~2023)」 목표
 - 산업융합 시장규모 확대(국내 융합시장 규모): 154조원('18) → 303조원('23)
 - 융합 신산업 일자리 창출(산업융합 유발 추가 고용창출): 15만명('18~'23)
 - 산업플랫폼을 통한 신산업 창출: 10개 산업플랫폼 구축, 50개 비즈니스 실증 추진(~'23)¹⁾
 - 총 재정투자계획(억원): 28,202('19)→33,365('20)→35,929('21)
 -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2019~2021년간 '산업의 융합경쟁력 강화' 분야가 1조 795억원~1조 6,824억원 규모로 가장 큰 예산규모
 - 부처별 재정투자계획: 2019~2021년간 산업통상자원부가 8,116억원~1조 1,350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
 - 주요 성과목표별 재정투자계획: 2019~2020년간 '1·2차 산업의 혁신기술융합'이 5,186~6,642억원 규모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의 경우 '주력 분야 선정 후 집중투자'가 9,984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9~2023)」의 실행계획별 주요 내용 (2019~2021년 기준)

실행계획	주요 내용
2019년도 실행계획 ('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총 재정투자계획: 2조 8,347억원 - 주요 분야(억원): 산업의 융합경쟁력 강화(11,489), 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위한 신시장 구축(8,178), 융합을 산업 전분야로 확산(7,769), 산업융합의 제도적 뒷받침(911) - 주요 부처(억원): 산업통상자원부(8,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7,705) 등 - 주요 성과목표(실적, 억원): 1·2차 산업의 혁신기술융합(5,186), 융합형 인력 양성(4,565) 등
2020년도 실행계획 ('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총 재정투자계획: 3조 3,365억원 - 주요 분야(억원): 산업의 융합경쟁력 강화(11,654), 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위한 신시장 구축(11,226), 융합을 산업 전분야로 확산(9,452), 산업융합의 제도적 뒷받침(1,033) - 주요 부처(억원): 산업통상자원부(9,2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7,940) 등 - 주요 성과목표(억원): 1·2차 산업의 혁신기술융합(6,642), 융합 신서비스 시장 창출(6,310) 등
2021년도 실행계획 ('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총 재정투자계획: 3조 5,929억원 - 주요 분야(억원): 산업의 융합경쟁력 강화(16,824), 융합을 산업 전분야로 확산(8,701), 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위한 신시장 구축(8,166), 산업융합의 제도적 뒷받침(2,238) - 주요 부처(억원): 산업통상자원부(11,350), 국토교통부(7,049) 등 - 주요 성과목표(억원): 주력 분야 선정 후 집중투자(9,984), 1·2차 산업의 혁신기술융합(7,273) 등

자료: 각 정책을 바탕으로 재구성

1) 산업플랫폼: 바이오, 자동차, 에너지, 첨단소재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 창출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비즈니스 실증: 산업플랫폼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초기 시장 형성 지원을 위한 실증 추진



- 최근 발표된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21년 실행계획」(‘21.5.)은 ‘산업 융합을 통한 K-뉴딜 성과 확산’을 비전으로, 데이터 융합, 신산업 창출, 융합 촉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
 -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 따른 산업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
 - 2021년 총 재정투자계획은 3조 5,929억원으로 전년 계획 대비 7.7% 증가한 규모²⁾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21년 실행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구분	주요 내용	
비전 및 목표	산업 융합을 통한 K-뉴딜 성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융합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신산업 창출을 통한 융합 성과 확산 • 선제적인 융합 촉진 환경 조성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4대 추진전략	9대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18,08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 확산을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14,394억원) - 융합의 전산업 확산 활성화 (3,135억원) - 국민 체감형 융합 성과 제고 (550억원) <li style="font-size: small;">*물공급-물순환 연계 융복합 시스템 개발, 융합형 인력양성 교육과정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융합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11,18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 기반 마련 (8,888억원) - 주요 산업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촉진 (2,297억원) <li style="font-size: small;">*산업디지털 전환 선도과제 발굴, 클라우드 기반 AI 제조 플랫폼 구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가트렌드(대세) 변화에 대응한 주도적 혁신 (4,1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을 통한 비대면 산업 성장 가속화 (2,299억원) - 저탄소·친환경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1,811억원) <li style="font-size: small;">*탄소중립 R&D전략 수립, AR/VR 비대면 실감 콘텐츠 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개선으로 융합 친화적 환경 조성 (2,55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개선을 통한 융합 성과 확산 (2,491억원) - 규제 샌드박스 활용 촉진 및 고도화 (63억원) <li style="font-size: small;">*디지털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규제 샌드박스 과제 집중 발굴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21년 실행계획」, 2021.5.를 바탕으로 재구성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공백기간 발생 지양 및 주요 산업정책과 연계 필요

-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임을 감안하여,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공백기간 발생 지양 필요
 - 동 기본계획은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1차 기본계획(2013~2017)과 제2차 기본계획(2019~2023) 사이에 미수립연도(2018년)가 존재
-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추진 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 주요 산업정책과 면밀히 연계할 필요
 - 「2021년 산업융합발전 실행계획」 상에, ①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나노·소재기술개발, 미래소재디스커버리,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등), ②미래자동차 발전 지원사업(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등), ③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친환경수소연료선박R&D플랫폼구축 등) 포함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손동희 예산분석관(02-6788-4660)

2) 국가 주요 정책과제인 디지털 뉴딜(1조 1,429억원, 31.8%) 및 그린 뉴딜(4,410억원, 12.3%), 비대면 혁신 분야(2,532억원, 7.0%) 중심 투자계획

2020 노인실태조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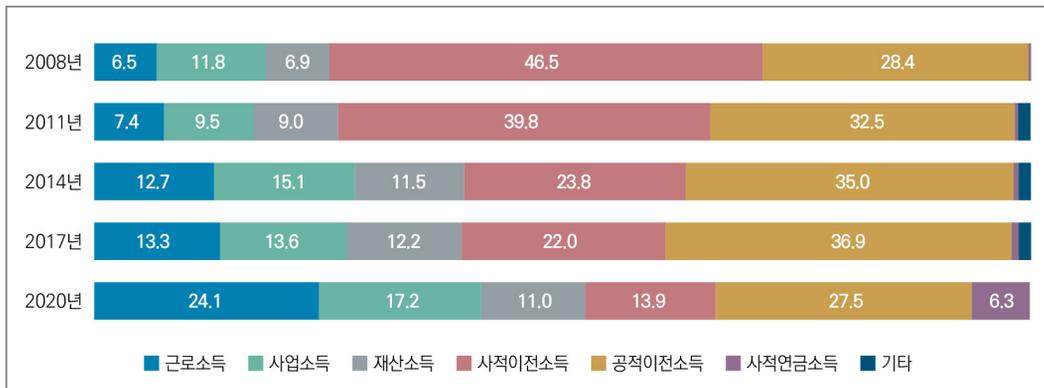
정부, 「2020 노인실태조사」 발표(2021.6.7.)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2008년부터 노인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20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 상태, 경제 상태 등의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
- 2020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의하면 노후소득 구성에 있어 본인 기여 소득의 증가로 경제적 자립성이 증대되었으며, 노인 단독가구의 보편화(78.2%), 정보화 기기 이용 수준 증가(스마트폰 보유율 56.4%) 및 학력 수준 향상(고졸 이상 비율 34.3%) 등으로 나타남

근로 및 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 개인 소득 증가로 인한 경제적 자립성 증가

- 근로 및 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의 향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증가함
 - 노인 개인 소득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2008년 700만원 → 2017년 1,176만원 → 2020년 1,558만원),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은 공적이전소득(27.5%)이고, 다음으로 근로소득(24.1%), 사업소득(17.2%), 사적이전소득(13.9%), 재산소득(11.0%) 순으로 나타남

노인의 개인소득원별 구성 비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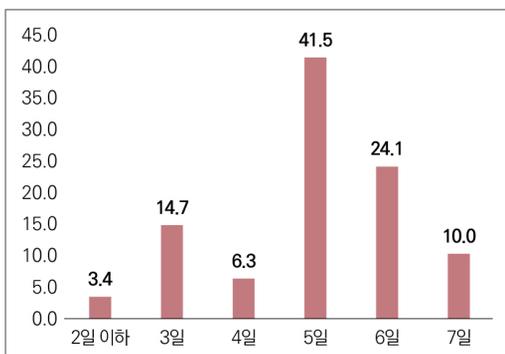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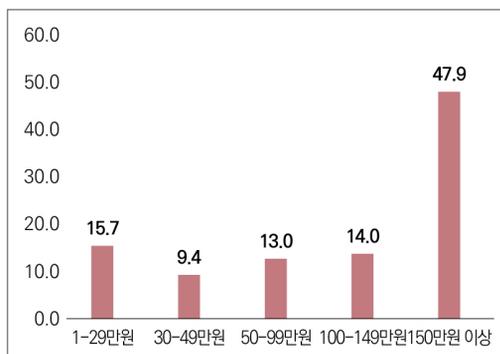
- 노인가구의 96.6%가 부동산을 보유(2억 6,182만원)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은 77.8%(3,212만원), 기타자산은 45.6%(1,120만원) 수준이며, 노인가구의 27.1%(1,892만원)가 부채를 가지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7년 30.9%에서 2020년 36.9%로 6%p 상승하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41.5%는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47.9%는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음

※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7년 42.2%에서 2020년 55.1%로 13%p 증가

주당 근무일수



월평균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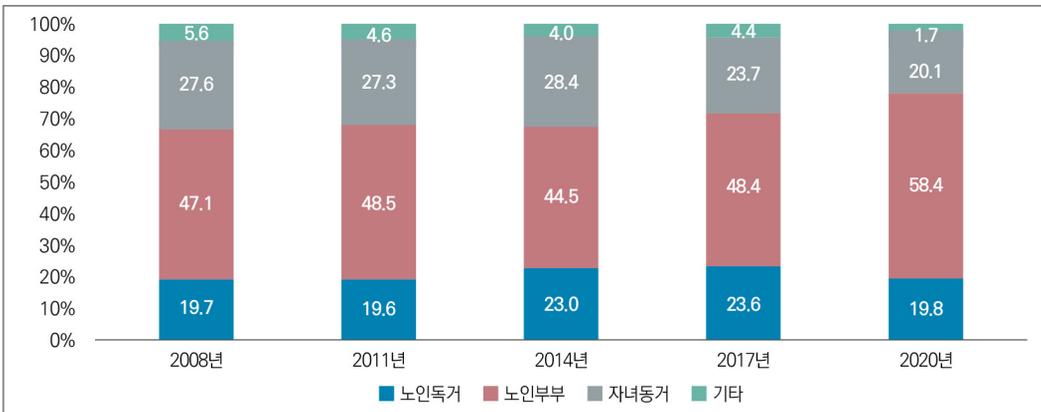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노인의 종사 직종은 단순노무직 48.7%, 농업업 13.5%, 서비스근로자 12.2%, 고위임원직 관리자 8.8%, 판매종사자 4.7% 등임
-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73.9%)이 가장 많으며, 건강 유지 8.3%, 용돈 마련 7.9%, 시간 보내기 3.9% 등임
-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2008년 3.3% → 2017년 6.7% → 2020년 7.9%)
 - ※ 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 71.9%, 취·창업형 사업단 13.5%, 서비스형 사업단 5.9%, 시장형 사업단 5.4%, 재능나눔활동 3.2%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 단독가구(노인독거 및 노인부부가구)의 증가 및 자녀 동거가구의 감소

- 노인 단독가구(독거+부부가구)는 증가하고(2008년 66.8% → 2020년 78.2%), 자녀동거가구(기혼 및 미혼자녀 동거)는 감소함(2008년 27.6% → 2020년 20.1%)
 -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감소(2008년 32.5% → 2017년 15.2% → 2020년 12.8%)하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노인의 자립적 요인(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를 형성하였다는 응답비율이 증가(2011년 39.2%→ 2017년 32.7%→ 2020년 62.0%)
 - 자녀동거 이유로는 기혼자녀 동거의 경우 노인의 정서적 외로움, 노인의 수발 필요성 등 노인의 필요(48.0%)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 미혼자녀 동거의 경우 '같이 사는게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38.8%)와 자녀에 대한 가사·경제적 지원 등 자녀의 필요(34.0%)에 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회적 관계에서는 자녀와의 왕래·연락은 감소하는 반면,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이웃과의 연락은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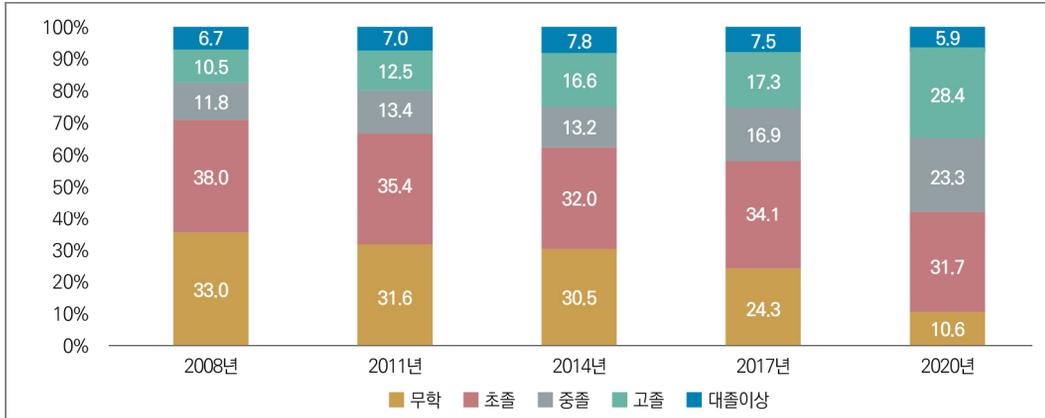
노인 거주형태의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 노인의 학력 수준은 무학노인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2008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함
 - 무학노인 비율 : 2008년 33.0% → 2017년 24.3% → 2020년 10.6%
 - 고졸이상 비율 : 2008년 17.2% → 2017년 24.8% → 2020년 34.3%

노인 학력 수준의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정보화기 활용능력 향상

- 노인의 80.3%는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휴식 활동이 52.7%, 취미오락 활동 49.8%, 사회 및 기타활동 44.8%, 스포츠 참여활동 8.1%, 문화예술 참여활동 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휴식활동은 산책 34.1%, 음악감상 5.2%, 기타 13.4% 순이며, 2017년에 비해 휴식활동의 비율이 43.5%에서 52.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활동 및 스포츠활동 등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율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참여활동 : 65~69세 5.7%, 85세 이상 2.4%
 - 스포츠참여활동 : 65~69세 10.1%, 85세 이상 1.5%
 -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임
 - 노인복지관 9.5%,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6.0%, 노인교실 1.8%, 공공 여가문화시설 4.7%, 민간여가문화시설 0.8% 등
 - 경로당은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방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임
- ※ 주요 프로그램 : 여가활동(음악활동, 바둑장기교실, 문학활동, 미술활동, 공연활동), 건강관리(한방치료, 안마교실, 방문간호), 건강운동(웃음교실, 요가·명상, 건강운동) 등

- 노인의 56.4%는 스마트폰을 보유(2011년 0.4%)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노인이 정보화 기기 사용률(65~69세 81.6%, 85세 이상 9.9%) 및 활용 역량이 높게 나타남
 - 노인들은 정보제공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74.1%), 일상 생활 속 정보화 기기 이용 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음
 -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 58.3%, 불편경험률: 60.4%)
 - 키오스크 활용을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 58.1%, 불편경험률: 64.2%)
 - ATM기기 이용 (경험률: 88.9%, 불편경험률: 38.4%)
 - 카드 전용 상점 이용 (경험률: 87.9%, 불편경험률: 31.3%)
 -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 (85세 이상: 문자받기 39.9%, 문자보내기 19.9% 등)

연령별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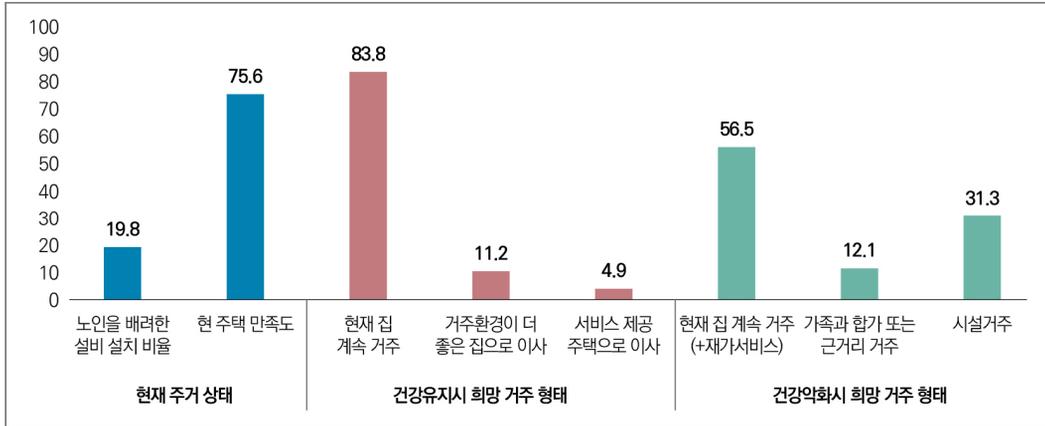
구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문자받기	96.2	87.4	71.8	56.1	39.9
문자보내기	92.4	77.0	55.6	37.1	19.9
정보검색	77.5	50.0	29.0	13.2	5.6
사진동영상촬영	74.6	52.3	36.6	21.4	7.6
음악듣기	43.0	26.8	14.4	7.6	3.9
동영상보기	56.4	36.3	18.2	9.8	5.1
SNS이용	40.8	24.1	10.9	6.1	3.1
금융거래	25.2	9.7	4.3	2.0	0.7

자료: 보건복지부

생활환경: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 증가

-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79.8%이며, 주거 형태는 아파트 48.4%, 단독주택 35.3%, 연립·다세대 주택 15.1%, 기타 1.2% 순임
 - 노인의 75.6%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며, 19.8%는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를 갖추고 있음(노인편의설비: 실내 문턱 여부, 핸드레일 설치 여부, 욕실이나 화장실 안전 손잡이 여부 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일·매트·시트지 등의 설치 여부)
 - 노인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며,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31.3%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노인의 주거상태 및 희망 거주 형태



자료: 보건복지부

- 교통수단의 경우 노인의 71.2%는 외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을 하는 노인(2008년 10.1% → 2017년 18.8% → 2020년 21.9%)은 증가 추세임
 -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사항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에 따른 불편 경험률이 24.9%로 가장 높음
 - 노인의 20.8%는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을 경험하였고, 식당이나 커피숍 16.1%, 판매시설 이용 14.7%, 의료시설 이용 12.7% 시에도 차별을 경험함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노인세대의 다양한 욕구와 능력을 반영한 정책마련 필요

- 고령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2020년 36.9%)하고 있으며, 학력 수준과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이 높은 새로운 노인세대에 부합한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정책 마련 필요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0만 6,000명(2020. 11. 1.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임(2019년 15.5%에서 0.9%p 상승)
- 노인 단독가구(독거+부부가구)의 증가, 재가노인을 위한 보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정책 등 돌봄 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체계적 정책 방안 마련 필요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2021.6.8.) 및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공개」(2021.7.6.) 발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을 의미
 - 우리나라는 OECD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공공지출 유형 분류²⁾에 기초하여 세부 유형을 ① 직접일자리, ② 직업훈련, ③ 고용서비스, ④ 고용장려금, ⑤ 창업지원,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개 유형으로 구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사업 예시

유형	주요 내용	사업 예시
직접일자리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소득보조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 제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복지부)
직업훈련	실업자의 취업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실업위험 감소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제공	내일배움카드 (고용부)
고용서비스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직업탐색과 고용주의 인력확보를 지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고용부)
고용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촉진, 실직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지원, 일자리 질 향상 등을 위한 보조금 사업	고용창출장려금 (고용부)
창업지원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용자·시설·컨설팅 등 제공	창업기업자금 (중기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실업보험,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공적 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	구직급여 (고용부)

자료: 고용노동부

- 2020년 24개 부처 16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기준 33조 6,41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실적행액은 30조 9,501억원으로 실적행률은 92.0% 수준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2) ①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② 노동시장 훈련, ③ 일자리 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 ④ 고용인센티브, ⑤ 장애인 통합, ⑥ 직접일자리 창출, ⑦ 창업 인센티브, ⑧ 실직자 소득 보장 및 지원, ⑨ 조기은퇴 등 9개 유형



2020회계연도 유형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억원, %)

유형	사업수	예산		예산현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직접일자리	33	28,598	29,800	29,448	26,984	91.6
직업훈련	38	22,434	23,531	23,767	20,067	84.4
고용서비스	39	11,994	13,640	12,809	12,176	95.1
고용장려금	24	64,950	86,315	98,634	91,368	92.6
창업지원	23	23,585	24,263	29,618	29,221	98.7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9	103,447	140,348	142,142	129,685	91.2
합계	166	255,008	317,897	336,419	309,501	92.0

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및 세목변경, 예비비 및 추경을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에 수행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행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개별 사업에 대하여 평가지표(정량·정성 지표), 만족도 조사, 집행을 등을 종합하여 우수, 양호, 개선필요, 감액 등 4단계 등급 부여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주요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
 - 2020년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총 671만명, 22.6만개 사업장 지원³⁾
 - 고용유지지원금(77만명, 2.3조원)과 구직급여(170만명, 11.9조원)는 대량실업 예방, 경기침체 완충 등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 수행
- 2020년 수행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145개 내역사업의 평가 결과⁴⁾
 -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필요 36개, 감액 14개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액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2022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감액 의견을 송부하며, 그 외 사업별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2020년 11월 기준, 제3·4회 추경사업 제외

4) 일자리 사업 중 보조기지원 등 인프라성 사업, 해외취업, 어업 등 고용성과 측정이 곤란한 사업, 종료예정사업, 2019·2020년 신규사업으로 2018년 참여자가 없는 사업 등은 제외하여 평가

2020년 수행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등급별 사업 현황

(단위: 개)

유형	우수	양호	개선필요	감액	계
직접일자리	4	21	7	6	38
직업훈련	4	23	12	3	42
고용서비스	1	9	5	2	17
고용장려금	3	16	7	1	27
창업지원	2	12	5	2	21
계	14	81	36	14	145

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 성과평가 결과 감액 등급 사업 개선 권고 사항

유형	소관	사업명	개선권고 사항
직접 일자리	고용부	신중년사회공헌	• 퇴직 전문인력의 역량에 적합한 활동내용 발굴·개발 필요
	문체부	박물관운영활성화	• 참여종료 후 취업연계가 곤란하므로 사업방식 재검토 필요 • 벽오지 박물관 참여자 중도이탈 문제 완화 방안 마련
	산림청	산림휴양 서비스매니저	• 지역별 인력 수요조사에 근거한 배분 필요(균등 배분 지양) • 숲생태관리인과 업무 내용, 근무지 등 중복 우려
	산림청	산불예방진화대	•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를 선발하고 운영함에 따라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 취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 고용지원 필요
	행안부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 사업 목적, 대상 등을 고려, 사업 유형 재검토 필요 • 사업 참여자 수준별 맞춤교육 필요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 코로나19 지속에 대비, 대안적 활동프로그램 개발 필요
직업 훈련	방사청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 체계적인 수요조사에 기반한 훈련과정 설계 필요 • 훈련참여자에 대한 기업 실무연수 및 취업연계 추진 등
	산자부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교육	• 훈련 이수 후 관련 분야 취업이 저조하므로 개선방안 필요 • 훈련시간, 훈련수준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개편 필요
	해수부	선원직업안정사업	• 고용서비스 강화 필요 • 수급안정을 위해 구직자 중심훈련과정 신설·확대 필요 등
고용 서비스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 각 단계별 성과관리 강화 노력 필요 • 동료지원가 교육 시 장애유형별 맞춤 교육 필요
	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 고용부 청년취업지원사업 등과 중복 우려 • 중복 수혜 방지 등을 위해 참여자 체계적 관리 필요 등
고용 장려금	고용부	고령자고용환경 개선지원	• 적극적인 고령자친화기업 발굴 노력 필요
창업 지원	기상청	기상기업지원	• 고용성과 개선을 위해 참여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산자부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	• 교육 수료 후 창업 비율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참여자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빠르고 강한 회복, 포용적 회복을 위해 평가체계 강화·적용 -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고용노동부는 2022년 일자리사업의 운영 방향으로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 대비를 제시
 - (직접일자리)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유도
 - (직업훈련)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 확대
 - (고용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점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단계별 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을 계획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 추진
 - (고용장려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 역할 확대
 - (창업지원)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에 집중적 투자 계획

추경을 통한 신규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통합적 성과관리 필요

- 2020년 추경을 통해 신규로 도입된 일자리사업들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추경을 통한 신규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
 - 고용노동부는 추경을 통한 신규 일자리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2020년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 2021년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해 계속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추경을 통해 도입된 신규 일자리사업도 성과평가를 수행하여 해당 연도 정부의 일자리사업 재정활동에 대하여 통합적 분석을 하고 향후 일자리사업 설계·수행에 활용할 다양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필요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

- 국회는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2021.5.21.)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로, 환경의 세부분야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환경인지예산(녹색예산), 탄소인지예산, 기후예산(Climature Budget) 등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음
 - 당초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탄소감축인지’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 아산화질소 등도 감축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온실가스감축인지’로 수정됨
-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개정된 법률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기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하여야 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시행일)
원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결산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2. 1.1.
기금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재정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 「국가회계법」 개정 내용

내용	비고 (시행일)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1.

자료: 국가회계법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필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대상사업의 선정, 온실가스감축량 측정 방법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위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 아울러 사업담당자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를 인지하고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실시할 필요
- 대상사업 선정 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할 필요
 - 예산투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정부 전체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최소한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사업 뿐 아니라 부정적인 사업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은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지출도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세지출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등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대상은 아님



[참고] 해외 사례 : 프랑스의 녹색예산(Green Budgeting)¹⁾

-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정부 전체 예산안에 대해 환경영향을 분석한 녹색예산서를 공개함
 - 2017년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인 ‘하나의 지구(One Planet Summit)’ 회의에서 ‘녹색예산’(green budget) 도입을 선언하였고, 이후 녹색예산방법론 개발,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2020년 9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녹색예산검토’를 최초로 첨부함
 - 기후변화예산, 환경인지 예산 등을 도입한 국가는 다수 있지만 대부분이 정부지출에 포함된 기후변화 관련 지출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정부 전체 예산안의 환경영향을 분석함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탄소인지예산제도

항목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프랑스 녹색예산 (Green Budgeting)
목표	온실가스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저감 • 기후변화 적응과 자연재해 위험 예방 • 수자원 관리 • 순환 경제, 폐기물, 기술 위험 • 환경오염의 통제와 저감 • 생물 다양성, 자연, 농업, 숲의 보호
근거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2020 예산법 2019-1479」 「2019 에너지와 기후 법 2019-1147」
적용범위	예산, 결산	예산, 조세지출
대상 사업	예산, 기금의 재정 사업	재정사업, 조세지출 사업
도입연도	2023 예산안	2021 예산안
방법론 개발		합동 태스크포스(재정경제부의 재정감도관실과 생태전환부의 환경·지속가능성장위원회)
평가, 태깅 ¹⁾ 및 예산서 작성		다부처 워킹그룹(생태전환부의 환경·지속가능성장위원회 재정경제부의 예산실, 조세정책실, 국고국)
영향평가	(예산서)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감축 기대효과, 성과목표 설정 (결산서) 예산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태깅) 각 사업이 환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태깅
공개	예산, 결산에 부속서로 제출	예산(안)에 부속서로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사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주: 1) 태깅(tagging, 꼬리표)은 예산에 꼬리표를 다는 것으로, 탄소인지예산(또는 녹색예산)에서는 환경 또는 기후 영향을 코드화하여 전체 예산 중 관련 부문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출처: OECD (2020), 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 : OECD Green Budgeting framework Highlights)

자료: 허경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탄소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방안, 재정포럼, 2021.6.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김태은 예산분석관(02-6788-4649)

1) 허경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탄소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방안, 재정포럼, 2021.6.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향후 접종 계획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발표(2021.6.17.)

- 질병관리청이 2021년 6월 17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3분기 중 신규 2,200만명에 대한 접종을 통해 9월말까지 누적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임
※ 2021년 6월 17일 기준으로 1차 접종 건수는 1,400만건임
- 3분기 접종 대상자는 ①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②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③ 50대 장년층, ④ 40대 이하(18~49세)임. 이 중 기타 대입수험생(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50~54세(50대 장년층), 40대 이하를 제외한 대상자들에 대한 접종은 시작되었으며, 3분기 접종 시작 이후 8월 11일 0시까지 3분기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접종 건수는 3,920,726건(87,964건 + 86,667건 + 627,744건 + 852,891건 + 37,749건 + 2,227,711건)임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개요

구분		접종 시작 일자	접종자 수 (접종 시작일-8월 11일 0시 기준)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6월 60~74세 등 예약자 중 미접종자	7월 26일	87,964명
	6월 사회필수인력 ¹⁾ 등 예약자 중 미접종자	7월 5일	86,667명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고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7월 19일	627,744명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및 돌봄인력	7월 13일	852,891명
	기타 대입수험생	8월 중 예정	37,749명
50대 장년층	50~54세	8월 중 예정	-
	55~59세	7월 26일	2,227,711명
40대 이하(18~49세)	18~49세	8월 중 예정	-

주: 1) 경찰, 산불진화 관련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유통직원, 세관 검사직원 등을 포함함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2~3월 1차 대유행, 2020년 8~9월 2차 대유행, 2020년 12월~2021년 1월 3차 대유행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1년 7월부터 8월 현재 4차 대유행이 진행중임
- 1차 대유행(2020년 2~3월) 확진자 수는 9,775명, 2차 대유행(2020년 8~9월) 확진자 수는 9,506명, 3차 대유행(2020년 12월~2021년 1월) 확진자 수는 43,999명 등으로 나타났음. 4차 대유행이 진행중인 2021년 7월과 8월의 확진자 수(8월 11일 0시 기준)는 59,245명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월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확진자 수		구분	확진자 수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20년 1월	11	10(90.9)	20년 11월	7,688	5,038(65.5)
20년 2월	2,920	146(5.0)	20년 12월	26,528	18,788(70.8)
20년 3월	6,855	834(12.2)	21년 1월	17,471	11,487(65.7)
20년 4월	979	412(42.1)	21년 2월	11,467	8,445(73.6)
20년 5월	703	505(71.8)	21년 3월	13,415	9,450(70.4)
20년 6월	1,331	953(71.6)	21년 4월	18,927	12,031(63.6)
20년 7월	1,506	669(44.4)	21년 5월	18,331	11,496(62.7)
20년 8월	5,641	4,315(76.5)	21년 6월	16,623	11,619(69.9)
20년 9월	3,865	2,748(71.1)	21년 7월	41,378	28,382(68.6)
20년 10월	2,700	1,867(69.1)	21년 8월	17,867	10,843(60.7)
			계	216,206	140,038(64.8)

주: 1. 괄호안은 전국 확진자 수 대비 수도권 확진자 수의 비율을 의미함

2. 2021년 8월 11일 0시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 2021년 8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16,206명이며, 이 중 남성은 110,353명(51.04%), 여성은 105,853명(48.96%)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50~59세의 확진자가 가장 많았는데, 38,523명이 확진되어 전체 확진자의 17.82%를 차지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의 사망자는 총 2,135명이며, 80세 이상 사망자가 1,13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3.02%를 차지함

코로나19 성별, 연령별 확진 및 사망 현황

(단위: 명, %)

구분		확진 현황	사망 현황
계		216,206	2,135
성별	남성	110,353(51.04)	1,064(49.84)
	여성	105,853(48.96)	1,071(50.16)
연령	80세 이상	6,385(2.95)	1,132(53.02)
	70~79세	11,494(5.32)	602(28.20)
	60~69세	27,120(12.54)	276(12.93)
	50~59세	38,523(17.82)	91(4.26)
	40~49세	34,356(15.89)	19(0.89)
	30~39세	31,848(14.73)	10(0.47)
	20~29세	38,037(17.59)	5(0.23)
	10~19세	17,643(8.16)	0 (0.00)
0~9세	10,800(5.00)	0 (0.00)	

주: 1. 괄호안은 전체 확진(사망)자 수 대비 해당 그룹 확진(사망)자 수의 비율을 의미함
 2. 2021년 8월 11일 0시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계약, 도입 및 접종 현황

- 코백스(COVAX facility)와의 1,000만명분 계약 이후 아스트라제네카(2,000만회분, 1,000만명분), 화이자(6,600만회분, 3,300만명분), 안센(600만회분, 600만명분), 모더나(4,000만회분, 2,000만명분), 등과의 계약 및 미국으로부터의 안센 무상지원(101.3만회분, 101.3만명분) 등 2021년 8월 11일 0시 기준으로 총 1억 9,301.3만회분, 1억 1.3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되어 있음

코로나19 해외 백신 계약 현황

(단위: 만 회, 만 명)

구분		공동구매		개별 계약사(구매)				무상지원	계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안센	모더나	노바백스	안센	
만회	회	2,000	2,000	2,000 600 4,000	600	4,000	4,000	101.3	19,301.3
	명	1,000	1,000	1,000 300 2,000	600	2,000	2,000	101.3	10,001.3
계약일		'20.10.9	'20.11.27	'20.12.23 '21.2.15 '21.4.24	'20.12.23	'20.12.31	'21.2.16	-	-

주: 1. 동 표의 수치는 각 계약사와의 계약에 따른 백신 확보(계약, 무상지원) 현황을 의미하며, 실제 공급받은 백신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2021년 8월 11일 0시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 2021년 8월 11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기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총 3,669.1만회분(코백스 168.1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355.7만회분, 화이자 1,788.4만회분, 모더나 245.5만회분, 안센 111.4만회분)임
- 2021년 7~8월 중 현재까지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약 3,000만회분인데, 이 중 908.2만회분은 7월에 기도입되었으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8월중 추가적으로 도입될 백신별 물량에 대하여는 자세한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하였음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 현황

(단위: 만 회)

구분 (도입완료 물량)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126.7)	-	-	43.2 (3일)	83.5 (13일)	-	-	
	화이자 (41.4)	11.7 (26일)	-	-		29.7 (21일)	-	
아스트라제네카 (1,355.7)		157.4 (24~27일)	-	-	463.0 (14, 17, 25, 27, 28일)	261.0 (1, 3, 4일)	118.8 (18일)	355.5 (3, 4, 5일)
화이자 (1,788.4)		-	100.2 (24, 31일)	100.0 (4, 14, 21, 28일)	175.0 (5, 12, 19, 23일)	325.0 (2, 9, 16, 23, 30일)	675.3 (7, 14, 21, 28일)	412.9 (4, 11일)
모더나 (245.5)				-		11.2 (1, 24일)	104.0 (8, 11, 22일)	130.3 (7일)
안센 (111.4)				-		101.3 (5일)	10.1 (29일)	

- 주: 1. 백신 물량은 실제 수치를 백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표기하였음
 2. 8월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약 21백만회분으로,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현시점에서 백신별 물량은 공개하기 어려움
 3. 2021년 8월 11일 0시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8월 1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총 21,635,106건이 이루어져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2.1%이며, 2차까지 접종이 완료된 건수는 8,062,980건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15.7%로 나타남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구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계
접종 건수	1차	10,543,848	9,034,666	1,129,774	926,818	21,635,106 (42.1%)
	완료(2차)	2,098,943	4,772,188	1,129,774	62,075	8,062,980 (15.7%)
	교차접종	942,424				

주: 1. 괄호 안은 인구(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비 접종률을 의미함
 2.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건수가 동일함
 3.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완료에 화이자 교차접종자 포함
 4. 2021년 8월 11일 0시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예산 현황

-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총 3,561억 6,300만원을 확보(이용 1,723억원, 제4회 추경예산 1,838억 6,300만원)하여 2,223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338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2021년에는 총 4조 6,571억 5,000만원을 확보(예비비 8,571억원, 제1회 추경예산 2조 3,484억원, 제2회 추경예산 1조 4,516억 5,000만원)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338억 1,3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4조 7,909억 6,300만원 중 1조 6,226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음
- 해외 백신 도입 외에도, 질병관리청은 국내 5개 제약사가 2021년 하반기 임상시험 3상 진입을 목표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임에 따라 국내 제약사와의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 선구매 계약에 필요한 선금금 720억원을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2021(8월 11일 0시 기준)					
	이용	제4회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172,300	183,863	356,163	222,350	133,813	857,100	2,348,400	1,451,650	4,790,963	1,622,651
코로나19 국산백신 선구매	-	-	-	-	-	-	-	72,000	72,000	0

주: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해 2020년 확보한 예산은 3,561억 6,300만원이며, 2021년 확보한 예산은 4조 7,909억 6,300만원임

자료: 질병관리청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확정(2021.6.24.)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획재정부로 통보하는 “주요R&D”와 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일반R&D”로 분류
 - 주요R&D사업은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R&D, 출연(연)·국공립(연) 주요사업·기관운영비, 국방 R&D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대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차년도의 주요 R&D 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다른 재정사업과 함께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여 9월초 국회에 제출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 총괄

- 2022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23조 5,082억원으로 2021년 22조 4,894억원 대비 4.5%(1조 18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2021년 전년대비 증가율에 비해 9.5%p 감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R&D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안)(B)	증감(B-A)
주요R&D 예산	146,977	152,678	197,314	224,894	235,082	10,188
전년대비 증가율	13.0	3.9	29.2	14.0	4.5	△9.5

주: 2021년 주요R&D예산액에는 주요R&D에서 일반R&D로 전환된 사업 1개 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년 주요R&D 배분·조정안 세부사업 수는 2021년 949개 대비 24.6%(233개) 증가한 1,182개 (신규 사업은 290개 1.9조원, 계속 사업은 892개 21.6조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R&D 신규·계속 예산 및 사업수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안)(B)	증감	
							(B-A)	(B-A)/A
합계	예산	146,977	164,728	197,314	224,894	235,082	10,188	4.5
	사업수	477	694	861	949	1,182	233	24.6
신규	예산	2,220	7,721	15,102	16,896	18,727	1,831	10.8
	사업수	73	187	211	253	290	37	14.6
계속	예산	144,757	157,007	182,212	207,998	216,355	8,357	4.0
	사업수	404	507	650	696	892	196	28.2

주: 2022년도 주요R&D 계속 사업 예산안 21조 6,355억원에는 기획평가비 3,326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년도 주요 R&D 부처별 예산 반영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조 7,807억원(3.1%), 산업통상자원부 5조 1,198억원(4.9%), 방위사업청 2조 7,387억원(△2.8%), 중소벤처기업부 1조 7,498억원(5.3%), 해양수산부 7,491억원(5.0%), 보건복지부 6,780억원(△0.5%) 등의 순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R&D 부처별 예산 반영 현황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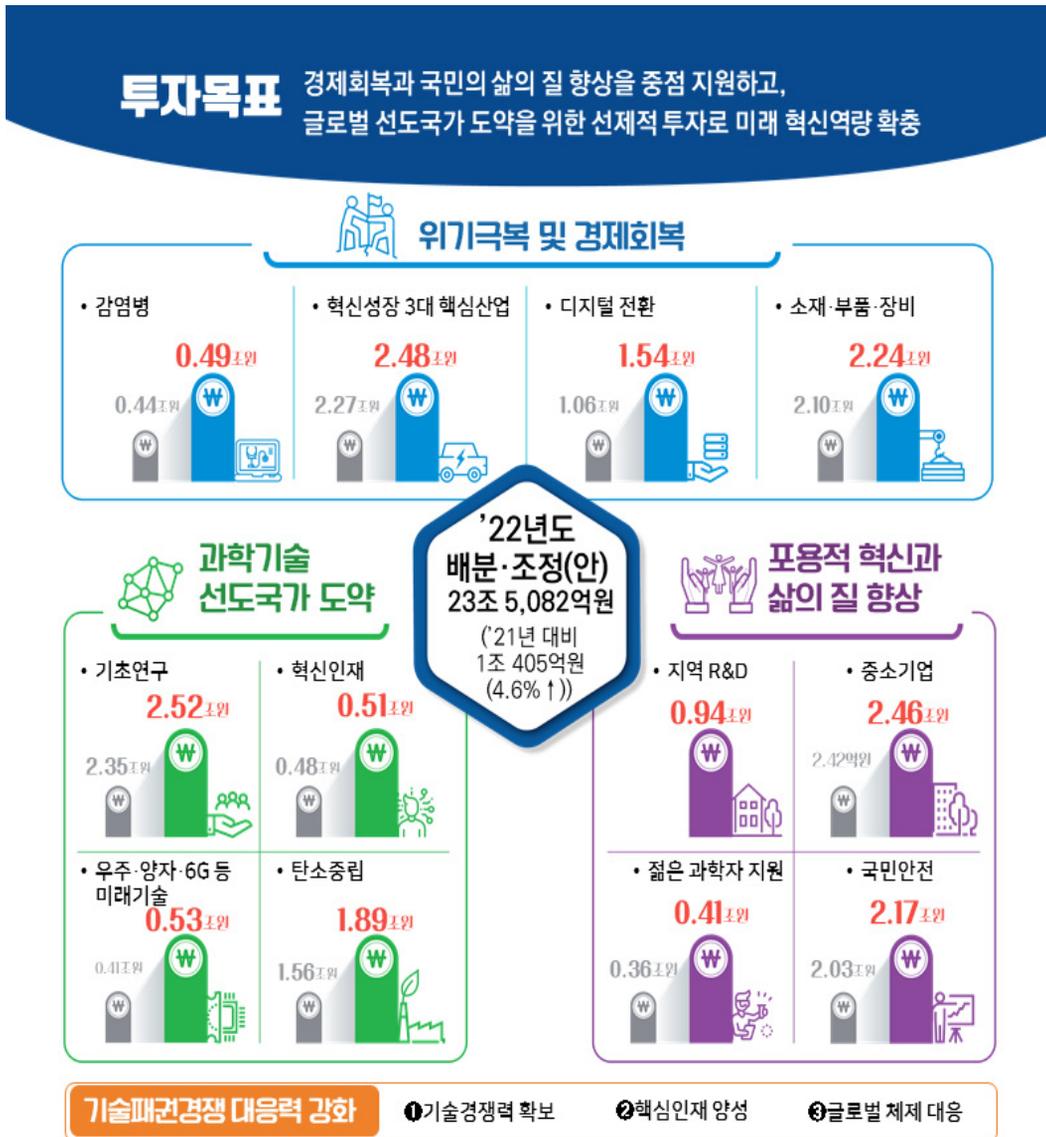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안)(B)	증감	
						(B-A)	(B-A)/A
합계	146,977	164,728	197,314	224,894	235,082	10,188	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381	67,951	77,785	85,166	87,807	2,641	3.1
산업통상자원부	30,979	31,507	41,356	48,826	51,198	2,372	4.9
방위사업청	16,464	19,947	25,999	28,173	27,387	△785	△2.8
중소벤처기업부	10,417	10,116	14,271	16,613	17,498	884	5.3
해양수산부	4,949	5,705	6,260	7,137	7,491	354	5.0
보건복지부	4,657	4,669	5,278	6,816	6,780	△36	△0.5
농촌진흥청	5,002	4,889	5,164	5,978	6,459	481	8.0
국토교통부	4,949	4,700	5,106	5,871	5,922	51	0.9
교육부	4,530	5,108	5,090	5,587	5,196	△391	△7.0
기타	9,648	10,133	11,004	14,727	19,344	4,617	31.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 주요 특징

- 2022년 주요 R&D예산은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2021.6.24.

-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 감염병 대응,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육성, 디지털뉴딜,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 투자
 - (감염병 대응) 전주기 감염병 예측·진단기술, 차세대 혁신 백신·치료제 개발 등에 전년대비 11.5% 증가한 총 0.49조원
 - *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 100억원(신규),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123억원(신규),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92억원(신규)
 -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바이오헬스분야는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기술개발, 미래차분야는 친환경·자율주행차용 통신·센서 개발, 시스템반도체는 차량·통신·전력용 화합물·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개발 등에 전년대비 9.1% 증가한 2.48조원
 - * 바이오헬스 1.72조원(5.6% 증), 미래차 3,936억원(10.5% 증), 시스템반도체 3,613억원(26.9% 증)
 - (디지털뉴딜) 블록체인 기술, 5G융합서비스, 인공지능 적용·확산, 정보보호, 비대면산업, 디지털트윈 등에 전년대비 44.8% 증가한 1.54조원
 - * 데이터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 43억원(신규),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트윈 핵심기술개발 75억원(신규)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185개) 및 미래 선도품목(65개) 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등에 전년대비 6.3% 증가한 2.24조원
 -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실증기반 구축 250억원(신규)
-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및 혁신인재양성분야, 첨단 과학기술분야, 탄소중립분야 등에 투자
 - (기초연구 및 혁신인재양성)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 지속, 첨단기술분야 고급인력과 주력 산업수요와 연계한 융합인재 양성 등에 전년 대비 7.3% 증가한 2.52조원
 - * 개인연구 1조 6,283억원(10.3% 증), 집단연구 3,731억(18.9% 증)
 - * 혁신인재 양성 5,132억원(7.1% 증),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1,201억원(9.2% 증)
 - (첨단 과학기술분야) 한국형 발사체 상용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양자 컴퓨팅·인터넷, 6G 국제표준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개발 등에 전년대비 28.0% 증가한 0.53조원
 -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 864억원(신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 523억원(신규)
 - *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 100억원(신규), 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개발 60억원(신규), 사람중심 인공지능강국실현을 위한 차세대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350억원(신규)
 - (탄소중립) 태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저장·활용,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개발 등에 전년대비 20.9% 증가한 1.89조원
 - * 에너지 생산 0.48조원(13.6% 증), 에너지 가공·유통·소비 1.0조원(27.2% 증), 적응·자원순환 0.4조원(15.8% 증)
 - *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170억원(신규), 탄소 포집·저장(CCU) 3050 90억원(신규)



- (포용적 혁신과 삶의 질 향상)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 지속 성장, 젊은 과학자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국민안전·사회문제해결 등에 투자
 - (지역) 지역별 주력산업 한국판 뉴딜 연계 지원, 지역 혁신역량 연계·강화 등에 0.94조원
 - *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90억원(신규),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 76억원(신규)
 - (중소기업)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등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2.46조원
 - *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546억원(신규),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70억원(신규)
 - (젊은 과학자 지원) 젊은 과학자 안정적 연구기회 확보, 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 등 신진연구자 자기 주도적 연구 및 처우·지위 개선 등에 전년대비 13.4% 증가한 0.41조원
 - * 기초연구지원(신진연구) 3,109억원(25.1% 증), 인재활용확산지원(KIURI) 120억원(6.7% 증)
 - (국민안전·사회문제해결) 기후·복합 재난 예측·위험감지, 미세먼지·생활환경, 치안·돌봄서비스 등 사회문제해결 R&D 강화 등에 전년대비 7.2%가 증가한 2.88조원
 - * 재난위험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25억원(신규),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21억원(신규), 웨어러블 기반 해상화재화확사고대응기술개발 26억원(신규),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기술개발 51억원(신규)
- (투자시스템 고도화)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투자 시스템 전환, 부처 협업사업 확대 등
 - 부처협업R&D사업 및 민군 협력 예산 확대,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우수성과 이어달리기를 통해 성과 확산형 투자체계 구축,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 학문분야간 융합연구 등 강화
 - * 다부처특위 통과 협업사업 1,542억원(93.5% 증),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2,038억원(50.6% 증) 등

주요R&D의 중점투자분야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중점투자 분야의 주요R&D사업 예산이 증가하였고, 신규 사업의 예산 비중도 확대되어 사업 간 유사·중복성 및 기획의 충실성, 기대성과 등에 대해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필요
 - 중점투자분야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 디지털전환 44.8%, 첨단 과학기술 28.0%, 탄소중립 20.9%, 감염병 대응 11.5%, 혁신성장 3대 산업 9.1%, 기초연구 7.3%, 인재양성 7.1%, 소재·부품·장비 6.3% 등
 - 주요R&D 내 신규 사업 예산 비중: ('18) 1.5% → ('19) 4.7% → ('20) 7.7% → ('21) 7.5% → ('22) 8.0%

영국, 2021~2022 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발표

영국 재무부, 2021~2022 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¹⁾ 발표²⁾(2021.5.13.)

- 총 지출 8,694억 3,900만 파운드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2,536억 7,800만 파운드(△22.6%) 감소
 - 부처별 지출한도(DELT)³⁾는 4,762억 7,400만 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⁴⁾은 3,175억 9,40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각각 608억 1,100만 파운드(△11.3%), 1,740억 5,700만 파운드(△35.4%) 감소
 -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⁵⁾은 755억 7,10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188억 1,000만 파운드(△19.9%) 감소

FY2021~2022 본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21-22 예산안	2020-21 잠정치	2019-20 실적치
부처별 지출한도(DELT)	476,274	537,085	366,020
연간관리지출(AME)	317,594	491,651	223,999
총 순예산(Total Net Budget)	793,868	1,028,736	590,019
총 비예산 지출 (Total Non-Budget Expenditure)	75,571	94,381	65,334
총 지출 (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869,439	1,123,117	655,353
현금주의 조정 (Resource to cash adjustments)	△134,102	△248,516	△141,491
총 순현금소요액	735,337	874,601	513,862

자료: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1-22 : Main Supply Estimates, 2021.5. 발체

1) 영국(회계연도 4.1.~ 다음해 3.31.)의 예산편성 과정은 예산안(Budget) 등 세입예산 편성과 세출예산 등의 세출예산 편성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예산 일정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관습적으로 결정되고 있음. 보통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잠정예산(Votes on Account)을 의결한 후 3월경 예산안(Budget)이 의회에 제출되고, 5월경 본세출예산안(Main Supply Estimates)이 제출됨. 본세출예산안 등의 지출권한은 보통 7월에 의회에서 승인됨.(한국조세연구원, 「영국의 재정제도」, 2010.12.)

2)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1-22 : Main Supply Estimate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6125/CCS001_CCS032282944-001_HMT_Main_Estimates_2021-22_Bookmarked.pdf)

3)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Spending Review(지출검토)에서 확정된 향후 3개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상한으로 관리되는 통계 가능한 지출

4)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주도적(demand-led)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5)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관리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 국세·관세청의 코로나 19 대응 지원, 재무부의 금융기관·기업 및 개인 지원, 보건·사회복지부의 프로그램 및 행정 지출 등의 내역에서 전년도에 비해 감액 규모가 큼
 - 연간관리지출(AME)에서는 국세·관세청(HM Revenue and Customs)의 코로나 19 정부 대응 지원 내역에서 전년도 대비 1,026억 800만 파운드가 감액된 191억 5,700만 파운드가 편성되었고, 재무부(HM Treasury)의 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 지원 내역에서 전년도 대비 349억 8,900만 파운드가 감액된 205억 7,300만 파운드 편성
 - 부처별 지출한도(DEL)에서는 보건·사회복지부의 프로그램 및 행정 지출 내역에서 전년도 대비 200억 3,000만 파운드가 감액된 251억 100만 파운드가 편성되었고,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의욕적 산업 전략 산출 내역에서 전년도 대비 175억 5,400만 파운드가 감액된 46억 3,100만 파운드 편성

전년 대비 감액 주요 내역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소관	내역 (Subhead Detail)	2021~2022 예산안(A)	2020~2021 잠정치(B)	증감 (A-B)	
연간관리 지출 (AME)	국세·관세청 (HM Revenue and Customs)	코로나 19 (COVID-19)	자원 ¹⁾	19,157	121,765	△102,608
			자본 ²⁾	0	0	0
			계	19,157	121,765	△102,608
	재무부 (HM Treasury)	금융기관·기업 및 개인 지원 (Assistance to financial institu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자원	20,573	55,565	△34,992
			자본	0	△3	3
			계	20,573	55,562	△34,989
부처별 지출한도 (DEL)	보건·사회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보건·사회복지부 프로그램 및 행정 지출 (DHSC Programme and Admin expenditure)	자원	23,279	40,430	△17,151
			자본	1,822	4,702	△2,879
			계	25,101	45,132	△20,030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Department of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의욕적 산업 전략 산출 (Deliver an ambitious industrial strategy)	자원	4,534	21,948	△17,413
			자본	97	239	△141
			계	4,631	22,187	△17,554

주: 1) 자원(Resource): 공공서비스, 부처 행정비용 등과 같이 매일 일어나는 서비스 작용 등에 대한 지출

2) 자본(Capital): 도로, 철도 등 공공영역의 자산 등에 대한 투자 지출

자료: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1~2022: Main Supply Estimates, 2021.5. 발행

● 영국의 경제 및 재정 전망⁶⁾

- 영국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충격이 G7국가 중 가장 심각하였으며, 2020년 국내총생산은 △9.9%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백신접종 확대와 이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완화 등으로 2021년 4%, 2022년 7.3%의 GDP 성장 예상
- 2021년 실업률은 5.6%로 전년보다 상승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통화정책위원회(MPC)의 2% 목표치를 하회할 전망

영국 주요 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실적 19~20	전망					
		20~21	21~22	22~23	23~24	24~25	25~26
GDP 성장률	1.4	△9.9	4.0	7.3	1.7	1.6	1.7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1.8	0.9	1.5	1.8	1.9	1.9	2.0
실업률(LFS)	3.8	4.5	5.6	5.9	5.1	4.5	4.4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발췌

- 경제 재개와 긴급 재정지원 종료에 따라 2021~2022 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재정수지 적자)은 10.3%로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금융위기보다 높은 수준임
-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2021~2022 회계연도에 107.4%, 2023~2024 회계연도에 109.7%까지 증가하고, 이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의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

영국 공공부문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실적 19~20	전망					
		20~21	21~22	22~23	23~24	24~25	25~26
공공부문 순차입 전망 (public sector net borrowing)	2.6	16.9	10.3	4.5	3.5	2.9	2.8
공공부문 순채무 전망 (public sector net debt)	84.4	100.2	107.4	109.0	109.7	106.2	103.8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발췌

6) 영국 정부의 예산안 발표(2021년 3월) 시 영국 예산책임청(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에서 다음 회계연도 경제 및 재정 전망 발표(<https://obr.uk/efo/economic-and-fiscal-outlook-march-2021/>)



- 금번 5월 발표한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외에 영국 정부는 3월 세입을 포함한 예산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 계획,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공개한 바 있음

- 코로나19 대응 조치 종료 시기 조정

- 고용지원(CJRS)⁷⁾, 자영업자 소득보전(SEISS)⁸⁾을 2021.9월 말까지 연장 시행
- 저소득층 가구 지원(Universal Credit)⁹⁾ 규모 인상 조치 6개월 연장 시행
- 코로나19 영향이 큰 일부 업종에 대한 부가세율 인하(20→5%) 2021.9월 말까지 연장

- 중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조치

- 2023년 법인세율 인상(19→25%)¹⁰⁾

- 투자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

- 대규모 투자세금 공제¹¹⁾를 실시하고, 소기업에 대한 신기술 보급 등 생산성 제고 노력 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국 인프라 은행을 설립하고, 민간 및 지방정부의 인프라 구축 사업 시 자금 지원

행정예산분석과 박인재 예산분석관(02-6788-3772)

7)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비자발적 휴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 급여를 80% 이내에서 지원(월 2,500 파운드 한도)

8) Self 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3개월 평균 소득의 80%를 지원(3개월간 7,500 파운드 한도)

9) 주당 20파운드 지급

10) 이익이 5만 파운드 이하인 경우 19%, 25만 파운드 초과 시 25%

11) super-deduction: '21.4.~'23.3. 중 공장 또는 기계설비 도입 시 해당 비용의 130%까지 공제

CBO, 2021~2031년 재정전망 수정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2021년 7월 2021~2031년까지의 중기 재정 및 경제전망을 수정 발표

- 당초 CBO는 2021년 2월에 재정·경제 전망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2021년 5월 18일 기준 제정된 법률 및 경제상황을 기반으로 재정 및 경제전망을 재산정하여 수정 발표
 - 특히, 2021년 3월 통과된 「2021년 미국구호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실업수당 등 정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전망 결과도 변화
 - ※ CBO는 재정·경제 전망보고서(「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에서 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하나 이하에서는 재정전망을 중심으로 소개

정부 수입 및 지출 전망

- 정부 수입은 2020년 GDP의 16.5%에서 2021년¹⁾ 17.2%로 증가하고, 2022~2031년에는 평균 GDP 대비 18%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 전망의 전제가 된 법률이 변하지 않는다면 개인소득세 수입은 2021년 GDP의 8.7%에서 9.6%로 증가하나 이후 예정된 세금 인상으로 인해 2025년에는 GDP 대비 8.8%로 감소 예상
 - 법인세 수입은 2021년 GDP의 1.1%에서 2023년 1.5%로 증가하고 2025년까지는 유지한 다음 점차 감소하여 2031년에는 1.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1) CBO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정전망 결과를 제공하는데, 미국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임 (즉, 2021회계연도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임).



CBO의 정부 수입 전망

(단위: 십억달러, %)

구분 (Fiscal Year)	실적	전 망											누적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22-2031
수입	3,421	3,842	4,390	4,597	4,671	4,734	4,984	5,253	5,396	5,572	5,754	5,957	51,308
(GDP 대비)	16.3	17.2	18.1	18.1	17.8	17.5	17.8	18.0	17.9	17.8	17.7	17.7	17.8
개인소득세	1,609	1,952	2,328	2,334	2,353	2,383	2,586	2,792	2,871	2,979	3,091	3,209	26,926
급여세	1,310	1,346	1,391	1,504	1,550	1,588	1,644	1,703	1,768	1,834	1,900	1,968	16,849
법인세	212	238	317	379	390	402	401	391	393	393	393	397	3,857
기타	291	306	355	381	378	359	354	367	364	366	371	382	3,676

자료: CBO,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Updated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Table 1-1.

- 정부 지출은 2021년 6.8조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구호계획법 제정에 따른 지출 증가에서 기인
 - 미국 구호계획법 제정에 따라 2021년 정부 지출이 1.1조 달러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출로 2021년 정부 지출이 GDP 대비 30.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3~2025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지출 감소 및 낮은 이자율 유지로 정부지출이 약 1.5조 달러(GDP 대비 약 21% 미만)로 감소하다가 2031년에는 금리 인상, 인구 고령화, 연방정부 의료비용 상승 등에 따라 GDP의 2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이자비용의 증가와 주요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지출로 GDP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의무지출) 2021년 의무지출은 2020년보다 2,840억 달러 증가한 4.9조 달러(GDP 대비 약 22%)로 추정되며, 세액공제, 메디케이드(Medicaid),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관련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것임
 - 이후 코로나19 관련 지출 감소로 의무지출은 2024년 약 GDP의 14%로 감소하나 인구 고령화 및 연방 의료비용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점차 증가하여 2031년 GDP 대비 15%로 전망
 - (재량지출) 2021년 재량지출은 총 1.7조 달러로 2020년 재량지출보다 250억 달러 증가 예상
 - 2020~2021년에 제공된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2024년까지는 재정지출이 감소한 후 202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31년에는 1.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러나 GDP 대비 비중은 2022년 6.8%에서 2031년 5.6%로 지속적으로 감소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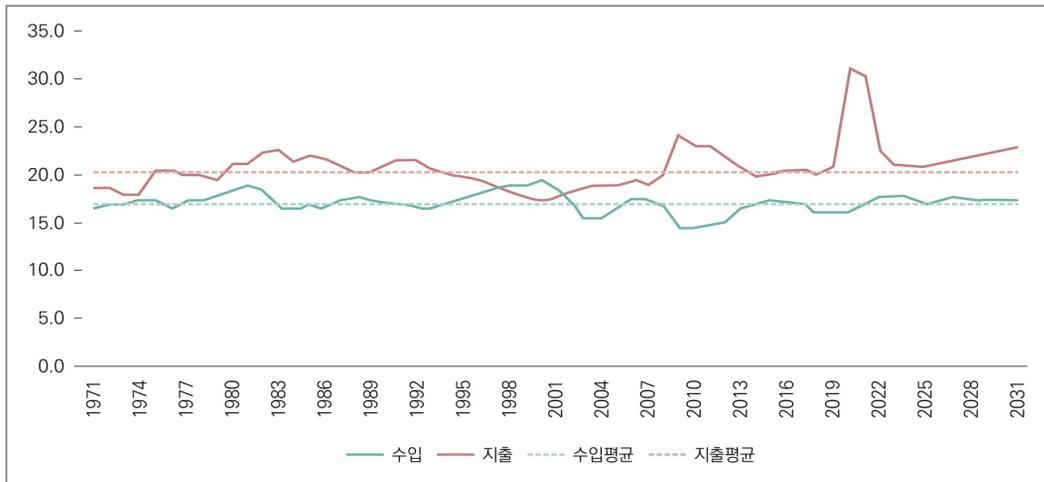
CBO의 정부지출 전망

(단위: 십억달러, %)

구분 (Fiscal Year)	실적	전 망											누적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22-2031
지출	6,550	6,845	5,544	5,386	5,423	5,731	6,033	6,330	6,792	6,935	7,415	7,812	63,402
(GDP 대비)	31.2	30.6	22.8	21.2	20.7	21.2	21.5	21.7	22.5	22.2	22.9	23.2	22.0
의무지출	4,577	4,862	3,589	3,461	3,488	3,711	3,907	4,088	4,418	4,446	4,780	5,025	40,912
재량지출	1,628	1,652	1,649	1,610	1,592	1,625	1,660	1,701	1,746	1,778	1,827	1,877	17,065
순이자	345	331	306	315	344	396	467	541	628	712	808	910	5,425

자료: CBO,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Updated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Table 1-1.

CBO의 GDP 대비 총수입·총지출 전망



재정적자 전망

- 2021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3조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0년 재정적자보다는 약 1,300억 달러 감소한 규모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의 3배에 이르는 수준
 - 지난 2021년 2월 발표에서는 2021년 재정적자를 2.3조 달러로 예측하였으나, 미국 구호계획법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0.7조 달러(법률 제정에 따른 변화분 1.1조 달러, 경제적 변화 -0.2조 달러, 기술적 변화 -0.2조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21년 재정적자는 미국 GDP 대비 13.4%로 1945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재정적자임(재정적자 규모가 가장 큰 해는 2020년으로, GDP의 14.9%에 해당)



- 2021년 이후 재정적자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가 2025년 이후 증가하여 2022~2031년 누적 적자 12.1조 달러(연평균 1.2조 달러), GDP 대비 4.2% 수준의 재정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21년 2월 2022~2031년 누적 재정적자는 12.3조 달러로 예상되었는데, 2021년 3월 제정된 구호 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수정 재정적자 전망치는 오히려 줄어든 것은 입법 및 순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를 경제적·기술적 변화에 따른 수입의 순증으로 상쇄했기 때문

CBO의 재정 전망

(단위: 십억달러, %)

구분 (Fiscal Year)	실적		전 망										누적 2022-2031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수입	3,421	3,842	4,390	4,597	4,671	4,734	4,984	5,253	5,396	5,572	5,754	5,957	51,308
지출	6,550	6,845	5,544	5,386	5,423	5,731	6,033	6,330	6,792	6,935	7,415	7,812	63,402
재정수지	△3,129	△3,003	△1,153	△789	△753	△998	△1,049	△1,077	△1,395	△1,363	△1,661	△1,855	△12,093
(GDP 대비)	△14.9	△13.4	△4.7	△3.1	△2.9	△3.7	△3.7	△3.7	△4.6	△4.4	△5.1	△5.5	△4.2

자료: CBO,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Updated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Table 1-1.

연방정부 채무 전망

- 2020년 말 연방정부의 채무는 GDP의 100%인 21조 달러, 2021년 말에는 GDP의 103%인 23조 달러로 전망²⁾
 - 이후 연방정부 채무는 2023~2025년까지 GDP의 100% 이하 수준으로 하락한 후 2031년에 106%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

CBO의 연방정부 채무 전망

(단위: 십억달러, %)

구분 (Fiscal Year)	실적		전 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초 기준	16,801	21,017	23,012	24,392	25,156	25,959	26,967	28,062	29,185	30,733	32,119	33,913
채무변동분	4,216	1,995	1,381	764	804	1,007	1,096	1,123	1,548	1,386	1,795	1,913
(재정적자)	3,129	3,003	1,153	789	753	998	1,049	1,077	1,395	1,363	1,661	1,855
(기타)	1,087	△1,008	227	△25	51	9	47	46	152	23	133	58
연말 기준	21,017	23,012	24,392	25,156	25,959	26,967	28,062	29,185	30,733	32,119	33,913	35,827
(GDP 대비)	100.1	102.7	100.3	99.2	99.1	99.6	100.1	100.3	101.8	102.6	104.5	106.4

주: 기타는 정부의 차입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총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요인으로, 학자금 대출 등 연방 신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현금잔고 및 현금흐름의 변화를 포함

자료: CBO,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Updated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Table 1-2.

예산분석총괄과 김윤성 예산분석관(02-6788-4623)

2) 한편,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데, CBO는 2021년 8월 1일 이전에 더 높은 부채 한도가 입법화되지 않으면 10~11월에 의무지출 등 미이행,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 바 있음(CBO, Federal Debt and the Statutory Limit, 2021. 7.)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 발표

EU 집행위원회, EU의 기후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패키지 ‘Fit for 55’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 공개(2021.7.14.)

- 「EU 기후법」이 유럽의회를 통과(2021.6.28.)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및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겠다는 적극적인 목표를 법률로 설정
- 유럽연합(EU)은 기후목표 달성에 더해,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하여 ‘Fit for 55’ 정책 패키지 발표(2021.7.14.)
 - ‘Fit for 55’는 공정하고(fair) 경쟁력 있는(competitive) 녹색(green) 전환의 추구를 목표로 기후, 에너지 및 연료, 운송, 건물, 토지 이용 및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규제정책 강화와 시장 메커니즘을 조화시킨 정책 패키지
- ‘Fit for 55’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칙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에 더해,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적 기후기금으로 구성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가격정책의 일환
 - CBAM은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서 제안되었으며, ‘Fit for 55’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이나 일정, 방식 등을 포함한 입법안이 공개

EU, ‘Fit for 55’ 주요 내용

가격정책	감축목표 강화	규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무상할당 폐지 등 배출권거래 제 강화 • 배출권거래제 확대: 해운, 도로운송, 건물 등 포함 • 에너지세제 개정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Effort Sharing Regulation) 개정 • 토지이용변경과 임업(LULUCF) 규정 개정 •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 에너지효율 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이산화탄소 성능기준 강화 • 대체연료를 위한 신규 인프라 배치 • ReFuelEU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혼합 의무화 • FuelEU Marine 이니셔티브: 유럽 항구 이용 선박의 연료 종류 등 보고

지원 조치

- 사회적 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등의 수익을 통해 혁신 촉진, 연대 강화, 취약계층 피해 감소 지원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의 주요 내용

- CBAM의 의의: 탄소배출 감축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
 - EU 국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한 자국의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탄소누출(carbon leakage)¹⁾을 감소시키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합의에 대한 타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CBAM 입법안(명칭: Regulation of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총 11장 36조 및 5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범위, 정의 등을 포괄하는 총칙부터 신고자의 의무 및 권리, 관할 당국, CBAM 배출권(인증서), 집행 등에 관한 규정 포함

CBAM 입법안의 주요 조항 및 내용

조항	주제	주요내용
제1장 (제1~3조)	주제, 범위, 용어별 정의	- 목적: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리스크 예방 - 적용대상: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부속서 I) - 적용국가: EU를 제외한 모든 역외국(예외는 부속서 II에 기술)
제2장 (제4~10조)	허가받은 신고인의 의무와 권리	- CBAM 상품 수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승인된 신고자의 의무 및 신고 내용(매년 5월 31일까지 연간 CBAM 신고서 제출 등) - 수입 상품에 포함된 배출량 계산 원칙 및 공인 검증자가 배출량을 확인하는 절차의 보고 요건 및 검증 원칙 - 제3국에서 지불되는 탄소가격을 고려하기 위한 원칙
제3장 (제11~19조)	관할 당국	- 관할 당국의 지정, 중앙집행자로서의 EU집행위원회의 역할 및 정보 공개 - 국가등록부(registry) 및 계정의 주요 특성, 수입 허가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등
제4장 (제20~24조)	CBAM 배출권	- CBAM 배출권의 판매, 반납 또는 재구매, 최종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수명 주기에 대한 상세 규칙 - 관할 당국에 의한 배출권 판매, 배출권 가격 산정방식 등
제9장 (제31조)	EU ETS의 무상할당과의 조율	- 부속서 I에 해당하는 상품은 과도기 동안의 EU ETS 무상할당량 범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감축량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한 이행법률은 EU집행위원회가 채택
제10장 (제32~35조)	과도 기간	- CBAM 과도 기간(2023.1.1.~2025.12.31.) 동안은 제품에 내재된 직·간접 배출량 및 해외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

자료: EU Commission(2021), "EU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바탕으로 재구성

1)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전지구적인 탄소배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의미함.

- (제도 시행방식) ① 탄소 국경세, ② 탄소세(소비세), ③ EU ETS 확장, ④ EU ETS를 기반으로 수입자에 대한 별도의 ETS 운영 등의 방식이 논의되었으나, 국제무역규범과의 합치성 등을 고려하여 'EU ETS에 기반한 별도의 ETS 운영방식'으로 결정
 - (배출권 구매) CBAM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자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특정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EU ETS의 탄소가격에 따라 CBAM 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EU 역외국의 생산자가 상품 생산에 사용된 탄소가격에 대한 지불을 입증할 경우 해당 비용은 공제 가능
 - ※ 동 입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과도 기간이 적용되어 동 기간 중에는 CBAM 배출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제품에 포함된 직·간접 배출량 및 원산지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보고가 의무화됨
 - (적용대상 산업)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추후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
 - (배출량 산정) 대상 품목의 배출량 산정 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량만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었으며(부속서 III), 제품 생산용 전기 생산에 필요한 배출량 등 간접배출량은 제외
 - ※ 대상 품목 확대 여부 및 간접배출량 포함 여부는 과도 기간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판단하여 조정할 것으로 예상
 - (배출권 가격 산정) CBAM 배출권의 가격은 매주 마지막 영업일에 공시되는 EU ETS의 경매 마감가격(closing price)의 평균치로 산정

CBAM 도입으로 인한 파급효과 모니터링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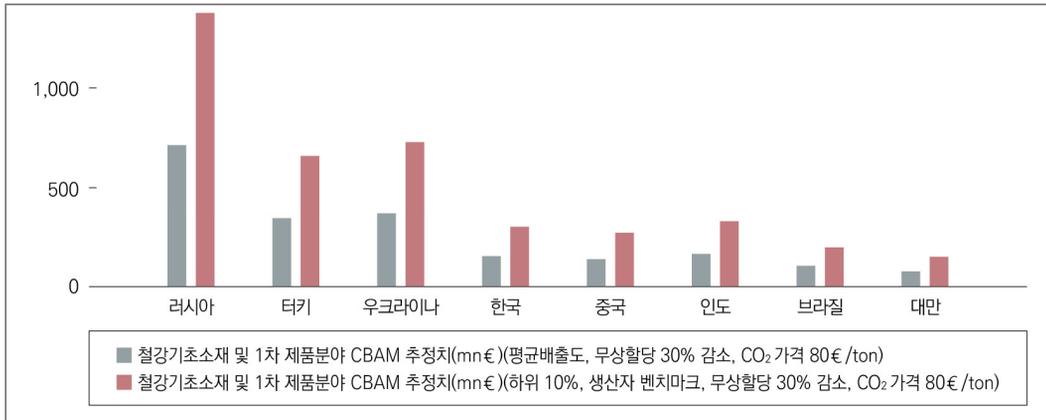
- EU가 발표한 CBAM은 ETS 자체는 아니지만 ETS가 확대된 형태로,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제무역질서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CBAM은 'Cap & Trade' 시스템 하에서 배출허용량을 규정하고 할당 받은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ETS 방식은 아니지만, ETS 가격을 반영하고 수입 품목에 내재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 CBAM 도입은 과거 '저비용 고효율'로 대표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가치를 '지속가능성', '탄소중립' 등으로 전환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CBAM 입법안은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초기 테스트가 될 것으로 보이며, 탄소배출 수준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EU 내 국가와의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됨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탄소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도를 EU 역내외 국가로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배출감축 비용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여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 우려



- 러시아, 중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 EU에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저항이 예상되며, 우리나라 또한 철강 기초소재 및 1차 제품 분야의 對 EU 수출 규모가 큰 편이므로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CBAM 시행으로 철강 기초소재 및 1차 제품 분야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단위: 백만€)



자료: Zimmer et al.(2021), "EU CBAM: Well Intended is not Necessarily Well Done".

- CBAM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 범국가적 차원에서 ETS를 시행하고 있는 EU를 제외하면, 2021년 1월말 기준 국가 단위의 ETS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8개국에 한정²⁾
 -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 ETS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추진해왔으므로,³⁾ CBAM 시행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와 적극적인 협의 노력 필요
 - 장기적으로 CBAM 과도기 종료 후 더욱 포괄적인 탄소국경조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TS 외에도 국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필요

사회예산분석과 정성영 예산분석관(02-6788-4637)

2) 국가 단위의 ETS를 시행 중인 국가는 뉴질랜드(2008), 스위스(2013), 카자흐스탄(2013), 대한민국(2015), 멕시코(2020), 영국(2021), 중국(2021), 독일(2021) 등 8개 국가임.
 3) 우리나라는 EU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대기오염물질(EU: CO₂, N₂O, PFCs, 한국: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과 분야(EU: 전력, 산업, 항공, 한국: 전력, 산업, 국내항공, 건물, 폐기물)에 ETS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0년 평균가격 또한 유사한 수준(EU: 28.28USD, 한국: 27.62USD)임.

주요 재정이슈

- ◆ 군 급식 개선대책 추진현황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군 급식 개선대책 추진현황

군 급식 개선대책 추진배경

- 지난 4월부터 5월, 휴가복귀 후 격리된 병사에 대한 부실급식 논란이 발생한 이후 국방부는 군 급식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현재 추가 대책 모색 중
 - 한 격리장병이 올린 급식 사진이 4월 20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소개된 이후 병사 급식이 부실하다는 제보 및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부실급식 논란 증폭
 - 국회 국방위원회는 4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방부에 급식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
 - 5월 26일에는 군 급식실태 현장점검 실시(논산 육군훈련소, 육군 51사단)
- 2021년도 급식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조 6,214억원으로 국방부 전체 예산 42조 349억원의 3.9%

2021년도 급식 관련 사업 예산(본예산 기준) 현황

(단위: 억원)

국방부 전체 예산	급식 관련 예산 (급식비 단위사업)				
	계	기본급식	증/특식	특수식량	민간조리원운영
420,349	16,214	13,990	1,368	228	629

주: 국방부 전체 예산은 총지출(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제외) 기준
 자료: 국방부

군 급식 개선대책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국방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조리여건 개선, 급식조달체계 개편, 민간위탁시범사업 확대, 취사식당 개선 등 군 급식 품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차례 발표
 - (기본급식비 인상)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10,000원으로 인상(‘21.6.15.확정, 7.1.시행)
 - 2021년도 상반기 급식단가는 8,790원이었으나, 부실급식 논란 후 단가 인상(13.8%)
 - 2022년에는 기본급식비를 11,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노력
 - (조리여건 개선) 급식 관련 인력(조리병, 민간조리원, 급양관리관, 영양사) 보강, 취사기구 보급 확대, 조리병 휴식기회 보장을 통한 조리병 업무부담 경감대책 발표(‘21.6.17.)



- (민간위탁시범사업 확대) 육군 부사관학교에 시범운영하던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21년 하반기 중 각 군 교육훈련기관 등 10여개 부대로 확대 추진계획 발표('21.6.17.)
- (급식조달체계 개편) 현 '先 식자재 조달·後 식단편성'에서 점진적으로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변경 추진계획 발표('21.6.17., '21.7.4.)
 - 이를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
- (취사식당 개선) 취사식당에 HACCP형 시스템¹⁾ 확대 도입계획 발표('21.7.11.)

군 급식 개선대책 주요 내용

구분	개선대책 주요내용
기본 급식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하반기(7월 1일)부터 병사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10,000원으로 인상 - 2021년 상반기 8,790원에서 13.8% 인상, 추가 재원 752억원은 이·전용을 통해 확보 - 육류, 치킨텐더 등 병사 선호품목 추가 - 급식혁신사업 확대: 병사식당 외 급식(연 4회 → 월 2회), 브런치(월 1회 → 2회) 등 - 자율운영부식비를 1인 1일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 인상 - 2022년 기본급식비 단가를 11,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기획재정부 제출)
조리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보강) 급양관리관, 조리병, 영양사, 민간조리원 증원 • (취사기구 보급 확대) 오븐기, 야채절단기 등 보급 확대, '조리용 로봇' 시범사업 추진 - '21년 하반기까지 '오븐기'를 각 군별 취사장에 1,000여대 우선 도입·설치 • (조리병 휴식기회 보장) 주말·휴일에 완제품 및 뷔페형 간편조식 제공 시범운영 추진
민간위탁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시범사업 대상을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각 군 교육훈련기관 등으로 확대 - 2021년 하반기 중 각 군 교육훈련기관 등 10여개 부대로 시범사업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
급식조달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의 '先 식단편성·後 식자재 (경쟁)조달' 체계로 개편 - 기존 '先 식자재 조달·後 식단편성'에서 장병선호를 반영하여 월별 식단편성 후 그에 맞춰 식자재 조달하는 체계로 변경 추진 -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한 후 식자재 조달 시 군납 농·축·수협조합 외에도 다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전환 추진
취사식당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사장에 HACCP형(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시스템 확대 - 현재 전체 취사식당 2,700여 개소 중 700여 개소에서 HACCP형 시스템 운영 - 상태가 양호하거나 부대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취사장을 제외한 800여 개소에 대해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HACCP형 시스템 도입 추진

자료: 국방부

1)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각종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주요 개선대책 세부내용

- (기본급식비 인상)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2022년 11,000원, 2023년 13,000원, 2024년 15,000원으로 인상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 4년간 급식비 인상률보다 상당히 높음
 - 향후 4년 간 인상률(추진계획): ('22) 25.1%, ('23) 18.2%, ('24) 15.4%, ('25) 2.6%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명시된 영내자급식비 예산 및 급식단가

(단위: 억원, 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급식단가	예산	급식단가	예산	급식단가	예산	급식단가	예산	급식단가
13,437	11,000 (25.1)	16,344	13,000 (18.2)	18,633	15,000 (15.4)	19,060	15,390 (2.6)	19,552	15,790 (2.6)

주: 괄호안은 전년대비 인상률(2022년은 2021년 상반기 대비 인상률)

자료: 국방부

- 지난 4년간 전년대비 인상률: ('18) 5.0%, ('19) 2.0%, ('20) 6.0%, ('21) 3.5%

2018-2021년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인상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상반기	2021하반기
1인당 1일 기본급식비(원)	7,855(5.0%)	8,012(2.0%)	8,493(6.0%)	8,790(3.5%)	10,000(13.8%)

주: 괄호안은 전년 대비 인상률, 2021년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인상률

자료: 국방부

- (조리인력 보강) 급양관리관²⁾, 조리병, 민간조리원³⁾등 확충으로 조리병 업무경감 및 급식 품질 제고
 - 급양관리관 480여명, 조리병 2,450여명, 영양사 47명, 민간조리원 900여명 증원 계획

조리인력 확충 계획안

구분	현행	계획안
급양관리관	병력 350명 이상 취사장당 1명	병력 150명 이상 취사장당 1명(480여명 증원)
조리병	- 분·소대급(병력 50명 규모) 취사장: 1명 - 중대급(병력 250명 규모) 취사장: 3명	- 분·소대급(병력 50명 규모) 취사장: 2명 - 중대급(병력 250명 규모) 취사장: 5명 → 2,450여명 증원
영양사	'급양대'에 배치	'사단급 전체'에 배치(47명 증원)
민간조리원	80명 이상 취사장 1명씩 배치, 300명 이상 취사장 추가운영 가능	80명 이상 취사장 2명씩 배치, 300명 이상 취사장 추가운영 가능(900여명 증원)

자료: 국방부

2) 급양관리관은 부식류 청구·수령·저장관리, 급식 예산집행·결산, 취사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

3) 민간조리원은 군 급식의 맛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군에서 채용하는 공무원 근로자



- (급식조달체계 개편) 장병 선호 반영 및 식자재 신선도 제고 등을 위해 기존 ‘先 식자재 (수의)조달 · 後 식단편성’ 방식에서 ‘先 식단편성·後 식자재 경쟁조달’ 방식으로 변경 추진
 - 매년 군납 농·축·수협과 식자재(농·수·축산물) 수의계약 체결 후, 정해진 식자재에 따라 표준 식단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월별 메뉴편성 후 필요 품목을 경쟁입찰로 조달하는 방식 추진
 - 이를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추진

군 급식조달체계 개편계획

구분	현행	개선안
주식(쌀)	‘군량곡 수급사무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식품부 정부 양곡(지자체 양곡창고)을 유상구매	현행 체계와 동일
부식	(농·수·축산물) ‘국방부-농·수·축협 계획생산·조달협정서’에 의거, 연간 급식기준량에 따라 매년 군납 농·수·축협과 수의계약으로 사전 계약하고, 정해진 식자재에 따라 급양대별(총 14개, 군단 규모)로 표준식단을 편성 (‘先 식자재 조달·後 식단편성’) (가공식품) 장류(된장 등) 및 육가공품(소시지 등) 등 가공식품은 조달청 경쟁조달이 원칙이나, 이중 44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으로 조달	식자재 품목과 물량 등 급식기준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장병 선호와 영양을 반영하여 월별 메뉴편성 후 필요한 품목과 물량을 다수 공급자 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 (‘先 식단 편성·後 식자재 경쟁조달’)

자료: 국방부

급식 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先 식단편성·後 식자재 경쟁조달’ 방식에서의 급식조달체계 개편은 시범적 운영을 통해 그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수 강화 등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 군납협의회는 경쟁입찰 도입 시 단가하락에 따른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 제시
- 조리인력 중 민간조리원은 격오지 근무 등에 따라 중도퇴직자수가 많고 신규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조리원 인력을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민간조리원 정·현원 현황

구분	정원(A)	현원(B)	결원(A-B)	중도퇴직자수(2020년)
민간조리원(명)	2,278	1,896	382	231

주: 정원과 현원은 2021년 6월 기준
자료: 국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배경 및 계획

- 산업구조의 변화로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구축 필요
 - 상용근로자 이외에 임시·일용,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
 -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 고용충격은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마련 필요
- 정부는 2020년 12월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계획
 - 산재보험 적용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월), 플랫폼 대표직종 종사자(22.1월), 기타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22.7월)로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
 -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식이 가입률은 낮은 반면,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 및 방식, 적용시기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결정할 계획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행

- 2020년 12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확대
 - 새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 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며,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¹⁾가 80만원 이상인 종사자

1) 월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



●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 실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²⁾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구분		근로자	예술인	특고	
적용 범위	적용대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특고(단기특고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자 65세 이후 신규자 등	일정소득 미만자 (좌동)	일정소득 미만자 (좌동)	
피보험자 관리	취득신고 등	사업주(원칙)	(좌동)	(좌동)	
보험료 징수	보수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좌동)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고안·직능 0.25~0.85%	실업급여 1.4% 고안·직능은 미부과	(좌동)	
	보험료납부자	사업주(원칙)	(좌동)	(좌동)	
실업 급여 지급	수급 요건	기여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주요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좌동)
	지급수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좌동)	
	지급기간	120~270일	(좌동)	(좌동)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여부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좌동)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좌동)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적용	미적용	(좌동)		

자료: 고용노동부

2) 특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 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음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³⁾하되,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⁴⁾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효과 검토 필요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
 -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면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사업의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0.9.11. 정부 제출)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특고 14개 직종 종사자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2022년 이후 수지차 흑자규모가 감소하고 2025년에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상기 개정안의 비용추계는 14개 직종 특고의 보험료율 1.6%를 가정하여 산출되는데 비해, 현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2개 직종에 대해 보험료율은 1.4%로 수입 감소분이 지출 감소분보다 작을 경우 실제 수지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임금근로자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계정분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적용대상별로 구분하여 별도 재정수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수입(A)	1,952	4,083	4,272	4,471	4,680	19,458
지출(B)	55	1,937	3,802	4,309	4,856	14,959
수지차(A-B)	1,897	2,146	470	162	△176	4,499

자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0.9.11. 정부 제출)을 바탕으로 재작성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전수연 예산분석관(02-6788-3741)

3) 월보수 133만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4) 영세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 & 이슈

2021년 Vol. 2 통권 제17호

발행일	2021년 8월 20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작	(주)명문기획 / 02-2079-9200~2

© 국회예산정책처, 2021

국회에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에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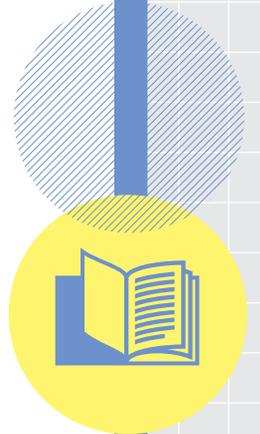
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일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간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의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805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